

KREI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부속 연구서

김태후 · 조승연 · 채홍기 · 이형용



KREI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부속 연구서

김태후·조승연·채흥기·이형용



연구 담당

김태후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조승연 | 부연구위원 | 설문조사 결과 분석

채흥기 | 연구원 | 조사 결과 편집

이형용 | 전문위원 | 설문조사 문항 검토

R953 연구자료-1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부속 연구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주)

I S B N | 979-11-6149-598-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1장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3
2. 논/벼 농가 조사 결과	7
3. 과수 및 채소 조사 결과	31
4. 축산 조사 결과	62
5. 시사점	82

제1장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4
〈표 1-2〉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 특성	5
〈표 1-3〉 축산 농가 응답자 특성	6
〈표 1-4〉 노지·시설별 벼 재배면적	8
〈표 1-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24
〈표 1-6〉 마진보험 가입 의향	26
〈표 1-7〉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27
〈표 1-8〉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28
〈표 1-9〉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30
〈표 1-1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52
〈표 1-11〉 마진보험 가입 의향	54
〈표 1-12〉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55
〈표 1-13〉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57
〈표 1-14〉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58
〈표 1-15〉 선도거래 가입 의향	60
〈표 1-16〉 선도거래 가입 거부 이유	61
〈표 1-17〉 마진보험 가입 의향	77
〈표 1-18〉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78
〈표 1-19〉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80
〈표 1-20〉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81
〈표 1-21〉 농가 수입 감소 주요인 및 세부 요인(요약)	82
〈표 1-22〉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요약)	84
〈표 1-23〉 재해보험 가입실태 및 보험 상품 수용성(요약)	86
〈표 1-24〉 보험상품 가입 결인 요인(요약)	88

제1장

〈그림 1-1〉 영농경력	8
〈그림 1-2〉 지역별 벼 재배면적 규모	9
〈그림 1-3〉 벼 재배농가 농업 조수입면적 규모	9
〈그림 1-4〉 농가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10
〈그림 1-5〉 농가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11
〈그림 1-6〉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12
〈그림 1-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13
〈그림 1-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14
〈그림 1-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15
〈그림 1-10〉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15
〈그림 1-11〉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16
〈그림 1-12〉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17
〈그림 1-13〉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정부 정책 수요	18
〈그림 1-14〉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19
〈그림 1-15〉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20
〈그림 1-16〉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21
〈그림 1-17〉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21
〈그림 1-18〉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22
〈그림 1-1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작물	23
〈그림 1-20〉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25
〈그림 1-21〉 소득안정제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29
〈그림 1-22〉 영농경력	31
〈그림 1-23〉 재배품목별 면적	32

〈그림 1-24〉 조수입	32
〈그림 1-25〉 농가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33
〈그림 1-26〉 농가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34
〈그림 1-2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35
〈그림 1-2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36
〈그림 1-2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37
〈그림 1-30〉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38
〈그림 1-31〉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38
〈그림 1-32〉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39
〈그림 1-33〉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40
〈그림 1-34〉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정부 정책	41
〈그림 1-35〉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42
〈그림 1-36〉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43
〈그림 1-37〉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44
〈그림 1-38〉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44
〈그림 1-39〉 거래관계 유형	45
〈그림 1-40〉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경험/영향	46
〈그림 1-41〉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로 인한 농가판매가격 변동 위험 완화 여부	47
〈그림 1-42〉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가 파기 또는 취소되는 이유	47
〈그림 1-43〉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해 농가수입에 미친 영향 정도	48
〈그림 1-44〉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의 파기 또는 취소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영농 활동	49
〈그림 1-45〉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50
〈그림 1-4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작물	51

〈그림 1-47〉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53
〈그림 1-48〉 소득안정제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56
〈그림 1-49〉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59
〈그림 1-50〉 축산경력	62
〈그림 1-51〉 축종별 사육두수	62
〈그림 1-52〉 조수입	63
〈그림 1-53〉 축산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64
〈그림 1-54〉 축산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64
〈그림 1-55〉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65
〈그림 1-56〉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66
〈그림 1-57〉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67
〈그림 1-58〉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활동	68
〈그림 1-59〉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68
〈그림 1-60〉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69
〈그림 1-61〉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70
〈그림 1-62〉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정부 정책	71
〈그림 1-63〉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72
〈그림 1-64〉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73
〈그림 1-65〉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산 활동	74
〈그림 1-66〉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74
〈그림 1-67〉 축산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75
〈그림 1-68〉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76
〈그림 1-69〉 소득안정 제정소득안정제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79

제1장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1. 조사 목적 및 설계

농업 경영 위험의 실태를 분석하여 농축산물 가격 위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위험, 생산비 상승 위험, 판매가격 하락 위험 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분석하여 농업 경영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기존의 정책과 비교하여 마진보험, 금융계정 등 시장 효율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에 대한 현장의 수요와 인식,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목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 위험 실태와 기존의 위험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였다.

KREI 현지통신원을 논/벼, 과수 및 채소, 축산 농가로 임의 추출하여, 2022년 7월 31일부터 동년 8월 4일까지 조사원이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최종

응답자 수는 논/벼 농가 151명, 과수 및 채소 농가 357명, 축산 농가 101명이었다.

1.2. 설문 응답자 특성 분석

논/벼 농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농업 관련 특성에 대한 요약통계량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논/벼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1	13.9
	충남/대전/세종	23	15.2
	충북	13	8.6
	전북	19	12.6
	전남/광주	23	15.2
	대구/경북	21	13.9
	부산/울산/경남	20	13.2
	강원	11	7.3
영농경력	20년 미만	25	16.6
	20년 이상	126	83.4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80	53.0
	2천만~5천만 원 미만	50	33.1
	5천만 원 이상	21	13.9
성별	남성	117	77.5
	여성	34	22.5
연령대	60세 미만	25	16.6
	60대	58	38.4
	70대 이상	68	45.0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논/벼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는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세종’이 23명 (15.2%)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경기/인천’과 ‘대구/경북’이 21명 (13.9%), ‘부산/울산/경남’이 20명(13.2%), ‘전북’이 19명(12.6%)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126명(83.4%)으로 ‘20년 미만(16.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2021년 시점에서 농업 조수입액은 ‘2천만 원 미만’이 80명(53%)으로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2천만~5천만 원 이상’이 50명(33.1%), ‘5천만 원 이상’이 21명(13.9%)이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77.5%이며,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68명(45%), ‘60대’가 58명(38.4%), ‘60세 미만’이 25명(16.6%)이다.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농업 관련 특성에 대한 통계량이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과수 및 채소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세부 영농형태	과수	100	28.0
	채소	257	72.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6	12.9
	충남/대전/세종	41	11.5
	충북	31	8.7
	전북	34	9.5
	전남/광주	51	14.3
	대구/경북	62	17.4
	부산/울산/경남	56	15.7
	강원	36	10.1
영농경력	20년 미만	95	26.6
	20년 이상	262	73.4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124	34.7
	2천만~3천만 원 미만	58	16.2
	3천만~4천만 원 미만	58	16.2
	4천만~5천만 원 미만	33	9.2
	5천만~7천만 원 미만	34	9.5
	7천만~1억 원 미만	23	6.4
	1억 원 이상	27	7.6
성별	남성	188	52.7
	여성	169	47.3
연령대	60세 미만	102	28.6
	60대	161	45.1
	70대 이상	94	26.3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과수 및 채소 응답자의 생산 작목은 ‘채소’가 257명(72%), ‘과수’가 100명(28%)으로 과수보다 채소 비율이 높다. 거주 지역은 ‘대구/경북’이 62명(17.4%), ‘부산/울산/경남’이 56명(15.7%), ‘전남/광주’가 51명(14.3%)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262명(73.4%)으로 ‘20년 미만(26.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2021년 시점에서 농업 조수입액은 ‘2천만 원 미만’이 124명(34.7%)으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천만~3천만 원 미만’ 및 ‘3천만~4천만 원 미만’(각각 16.2%), ‘5천만~7천만 원 미만’(9.5%) 등의 순으로 높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52.7%이며, 연령대는 ‘60대’가 161명(45.1%), ‘60세 미만’이 102명(28.6%), ‘70대 이상’이 94명(26.3%)의 순으로 높다.

축산 농가 응답자의 인구경제사회학적 및 농업 관련 특성에 대한 통계량이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축산 농가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사육 축종	한육우	81	80.2
	양돈	14	13.9
	기타	7	6.9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4	13.9
	충남/대전/세종	14	13.9
	충북	10	9.9
	전북	11	10.9
	전남/광주	13	12.9
	대구/경북	16	15.8
	부산/울산/경남	13	12.9
	강원	10	9.9
영농 경력	20년 미만	35	34.7
	20년 이상	66	65.3
2021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44	43.6
	5천만~1억 원 미만	23	22.8
	1억~2억 원 미만	18	17.8
	2억 원 이상	16	15.8

(계속)

구분		응답자 수	구성 비율
성별	남성	89	88.1
	여성	12	11.9
연령대	60세 미만	35	34.7
	60대	42	41.6
	70대 이상	24	23.8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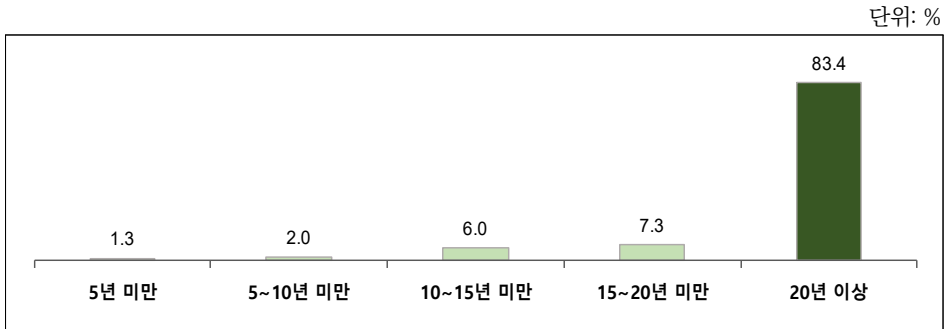
축산 응답자의 축종 유형은 ‘한육우’가 81명(80.2%), ‘양돈’이 14명(13.9%), ‘기타’가 7명(6.9%) 순이다. 응답자 거주 지역은 지역별로 대체로 균일하며, 영농 경력은 ‘20년 이상’이 66명(65.3%)으로 20년 미만(34.7%)보다 많다. 2021년 시점에서 축산 조수입액은 ‘5천만 원 미만’이 44명(43.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천만~1억 원 미만’이 23명(22.8%), ‘1억~2억 원 미만’이 18명(17.8), ‘2억 원 이상’이 16명(15.8%)의 순으로 높다.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88.1%이며, 연령대는 ‘60대’가 42명(41.6%), ‘60세 미만’이 35명(34.7%), ‘70대 이상’이 24명(23.8%)의 순으로 높다.

2. 논/벼 농가 조사 결과

2.1. 영농 관련 기본사항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8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5~20년 미만’이 7.3%, ‘10~15년 미만’이 6.0%, ‘5~10년 미만’이 2.0%, ‘5년 미만’이 1.3% 순으로 높다<그림 1-1>.

〈그림 1-1〉 영농경력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벼 재배면적 규모는 총면적이 (평균) 8,364평, (합계) 126만 2,960평이고, 노지 면적은 (평균) 8,363평, (합계) 126만 2,880평이다. 시설면적은 (평균) 1평, (합계) 80평으로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표 1-4>.

〈표 1-4〉 노지·시설별 벼 재배면적

단위: 평

벼 재배면적	노지면적		시설면적		총면적	
	평균(평)	합계(평)	평균(평)	합계(평)	평균(평)	합계(평)
	8,363	1,262,880	1	80	8,364	1,262,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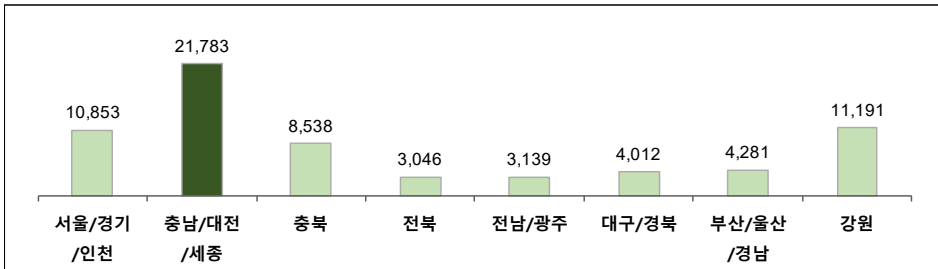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지역별 재배 총면적은 평균적으로 ‘충남/대전/세종’이 2만 1,783평으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강원’이 1만 1,191평, ‘서울/경기/인천’이 1만 853평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

〈그림 1-2〉 지역별 벼 재배면적

단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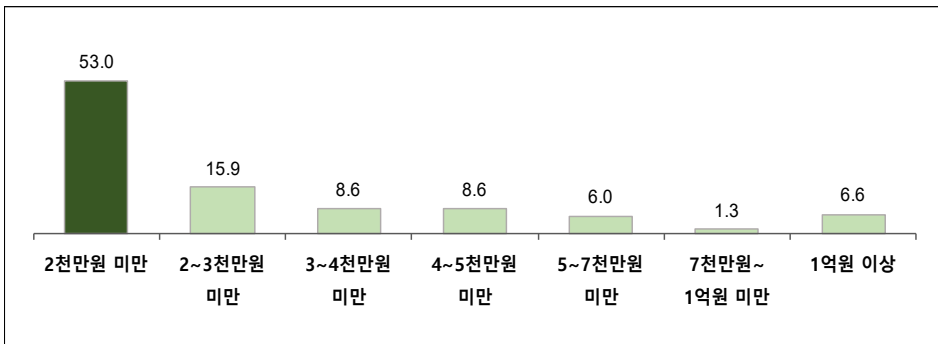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응답자의 농업 조수입은 ‘2천만 원 미만’이 53.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천만~3천만 원 미만’ 15.9%, ‘3천만~4천만 원 미만’과 ‘4천만~5천만 원 미만’이 각각 8.6%, ‘1억 원 이상’ 6.6%, ‘5천만~7천만 원 미만’ 6.0%, 7천만~1억 원 미만’ 1.3% 순이다<그림 1-3>.

〈그림 1-3〉 벼 재배농가 농업 조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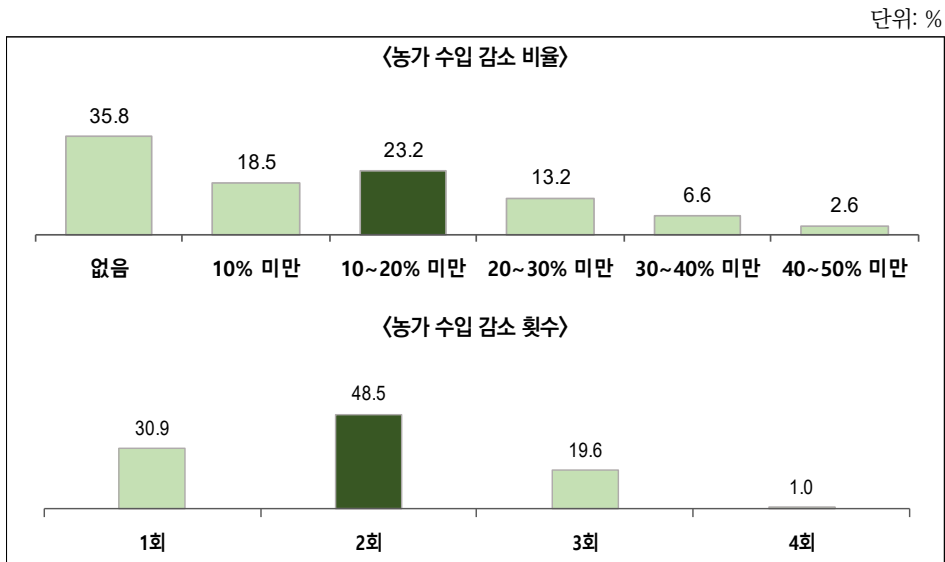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2.2. 농가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농가 수입이 정상적인 수준(5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험 및 횟수를 조사한 결과, ‘10~2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이 18.5%, ‘20~30% 미만’이 13.2% 순이며,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5.8%이다<그림 1-4>. 농가 수입이 감소한 횟수는 ‘2회’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30.9%, ‘3회’ 19.6% 순으로 높다<그림 1-4>.

〈그림 1-4〉 농가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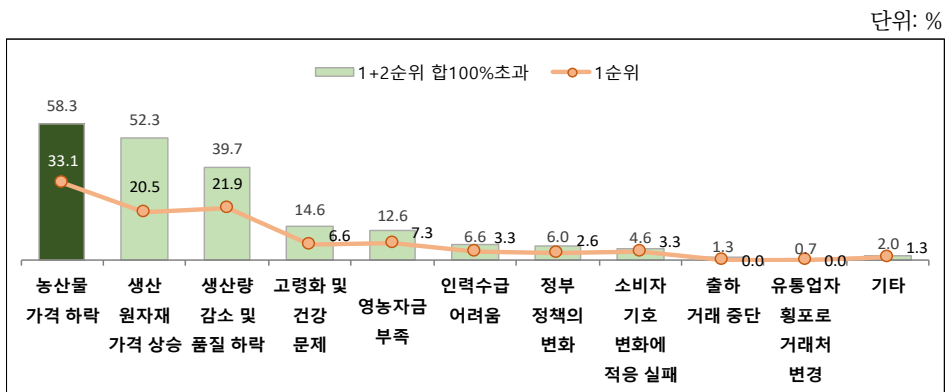
주: ‘농가 수입 감소 비율’은 N=151, ‘농가 수입 감소 횟수’는 n=97(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가 수입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1+2순위 합이 100%를 초과한다고 보았을 때, ‘농산물 가격 하락’이 5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 52.3%,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39.7% 순으로 높다<그림 1-5>. 1순위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

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21.9%,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 20.5% 등의 순으로 높다
<그림 1-5>.

〈그림 1-5〉 농가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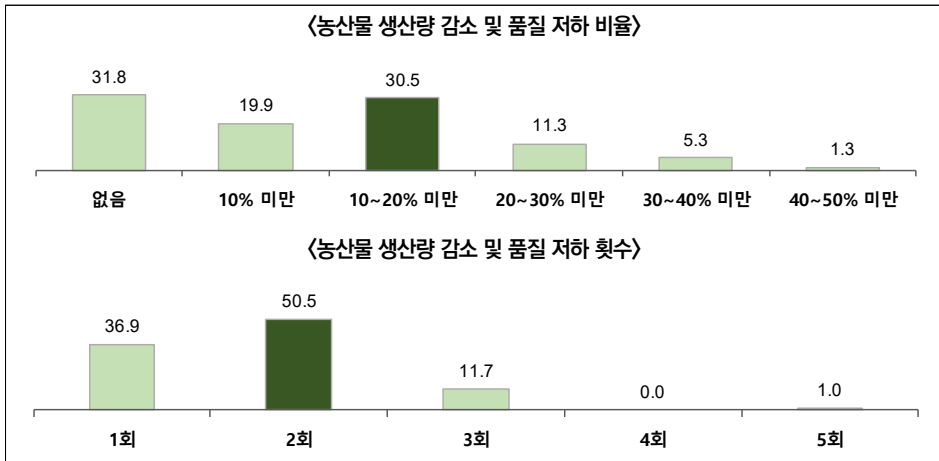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생산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 '10~20%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19.9%, '20~30% 미만' 11.3% 순으로 높다. '없음' 응답의 경우 31.8%이다<그림 1-6>.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2회'가 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36.9%, '3회' 11.7% 순으로 높다<그림 1-6>.

〈그림 1-6〉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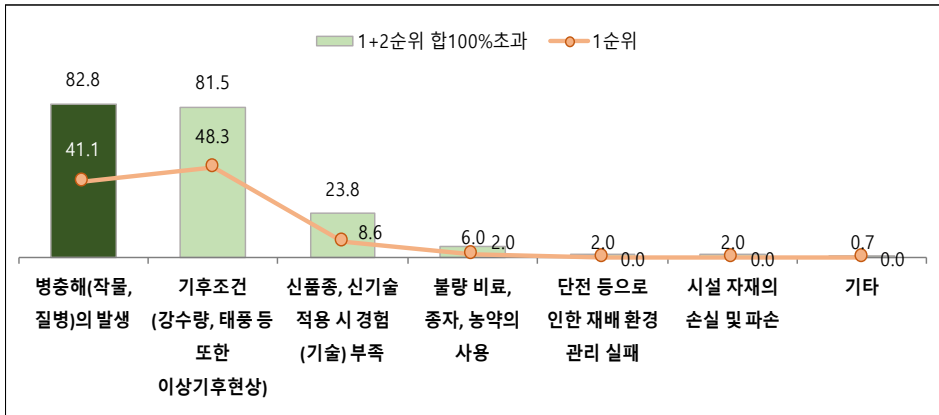
주: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151,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103(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은 '병충해(작물, 질병)의 발생'이 8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후조건' 81.5%, '신품종, 신기술 적용 시 경험(기술) 부족' 23.8% 순으로 높다<그림 1-7>. 1순위 기준으로 '기후조건'이 4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발생' 41.1%, '신품종, 신기술 적용 시 경험(기술) 부족'이 8.6% 순으로 높다<그림 1-7>.

〈그림 1-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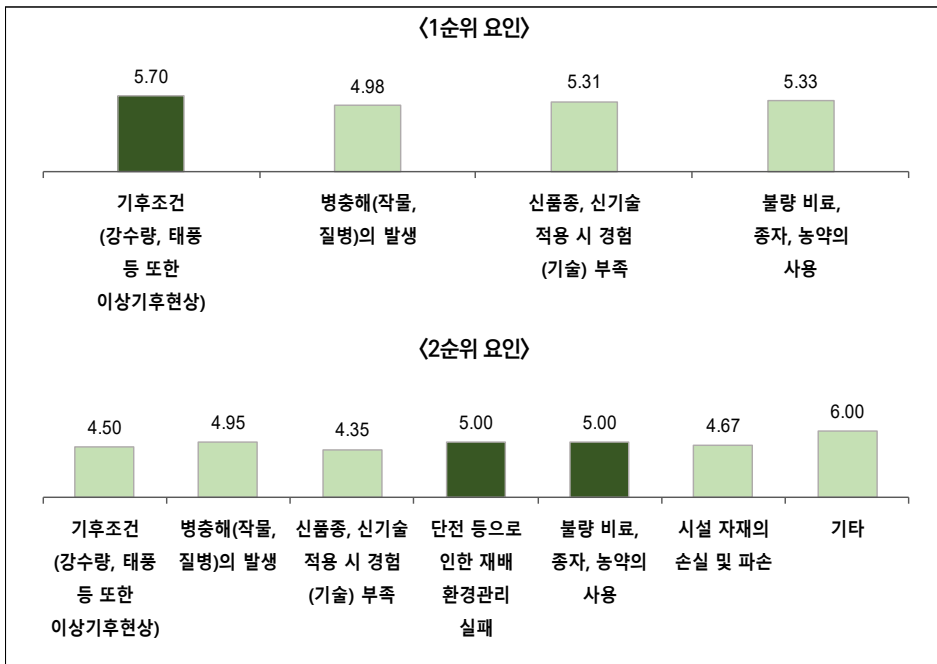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을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1순위 요인으로, ‘기후조건’이 5.7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불량 비료, 종자, 농약의 사용’ 5.33점, ‘신품종, 신기술 적용 시 경험(기술) 부족’ 5.31점 순으로 높다<그림 1-8>. 2순위 요인으로, ‘단전 등으로 인한 재배환경 관리 실패’, ‘불량 비료, 종자, 농약의 사용’이 각각 5.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작물, 질병)의 발생’ 4.95점, ‘시설자재의 손실 및 파손’ 4.67점 순으로 높다<그림 1-8>.

〈그림 1-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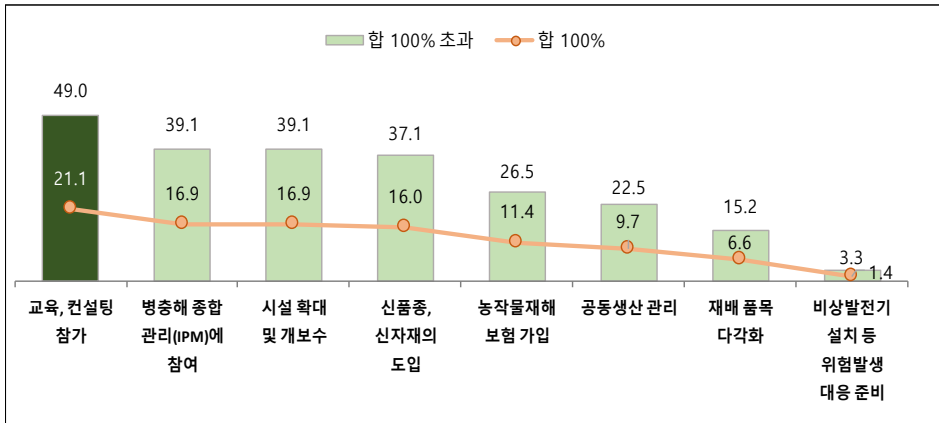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을 묻는 설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한 응답 비율은 ‘교육, 컨설팅 참가’가 4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종합관리(IPM) 참여’, ‘시설 확대 및 개보수’가 각각 39.1%, ‘신품종, 신자재의 도입’ 37.1% 순으로 높다<그림 1-9>. 합 100% 초과 기준으로, ‘교육, 컨설팅 참가’가 2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종합관리(IPM)에 참여’, ‘시설 확대 및 개보수’가 각각에서 16.9%, ‘신품종, 신자재의 도입’이 16.0% 순으로 높다<그림 1-9>.

〈그림 1-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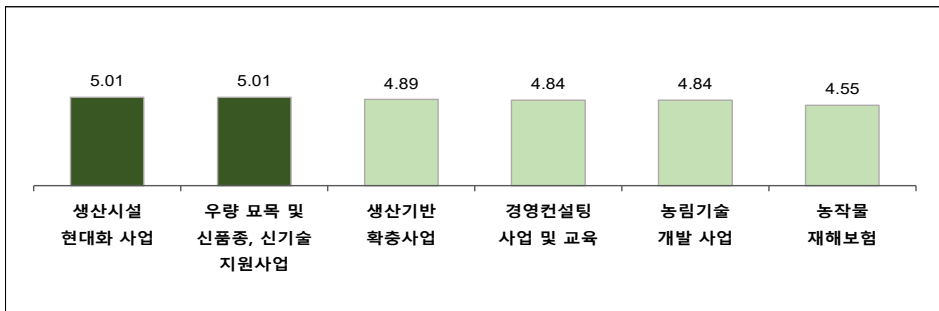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이 각각 5.0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생산기반 확충사업’ 4.89점, ‘경영컨설팅 사업 및 교육’, ‘농림기술 개발 사업’이 각각 4.84점, ‘농작물재해보험’이 4.55점 순으로 높다<그림 1-10>.

〈그림 1-10〉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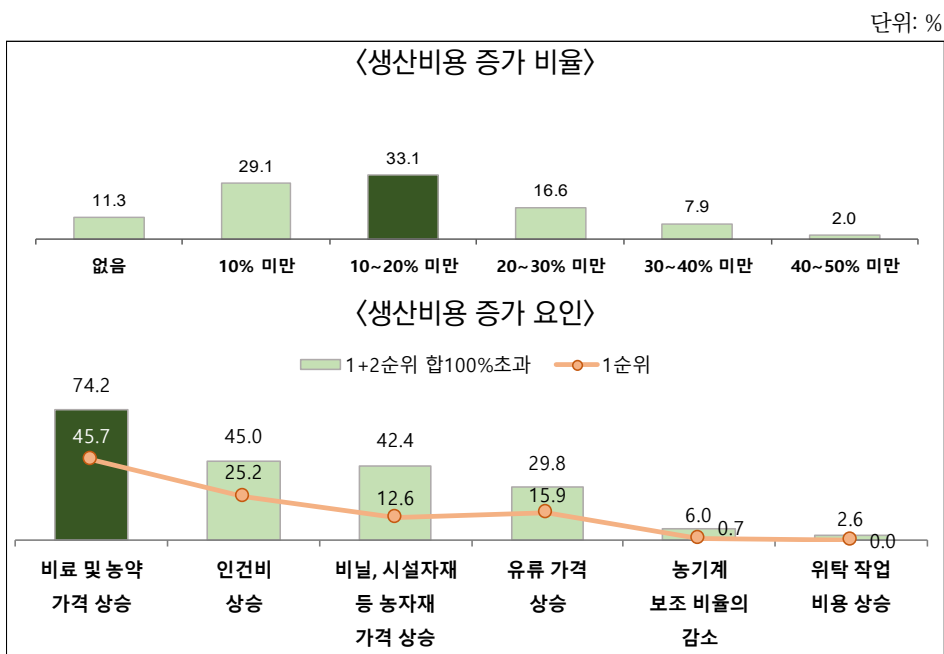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 미만’이 3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이 29.1%, ‘20~30% 미만’이 16.6% 순으로 높다<그림 1-11>.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이 74.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45.0%, ‘비닐, 시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42.4% 순으로 높다<그림 1-11>.

〈그림 1-11〉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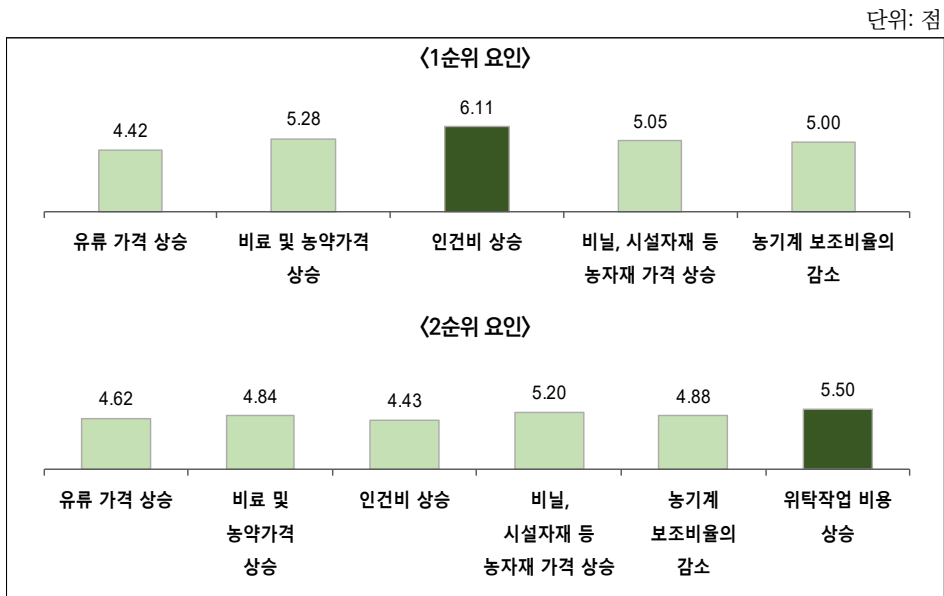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을 요인별로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1순위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 6.11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이 5.28점, ‘비닐, 시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5.05점, ‘농기계 보조 비율의 감소’가 5.00점, ‘유류 가격 상승’이 4.42점 순으로 높다<그림 1-12>. 2순위 요인으로, ‘위탁작업 비용 상승’이 5.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닐, 시

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5.20점, '농기계 보조비율의 감소' 4.88점 순으로 높다<그림 1-12>.

〈그림 1-12〉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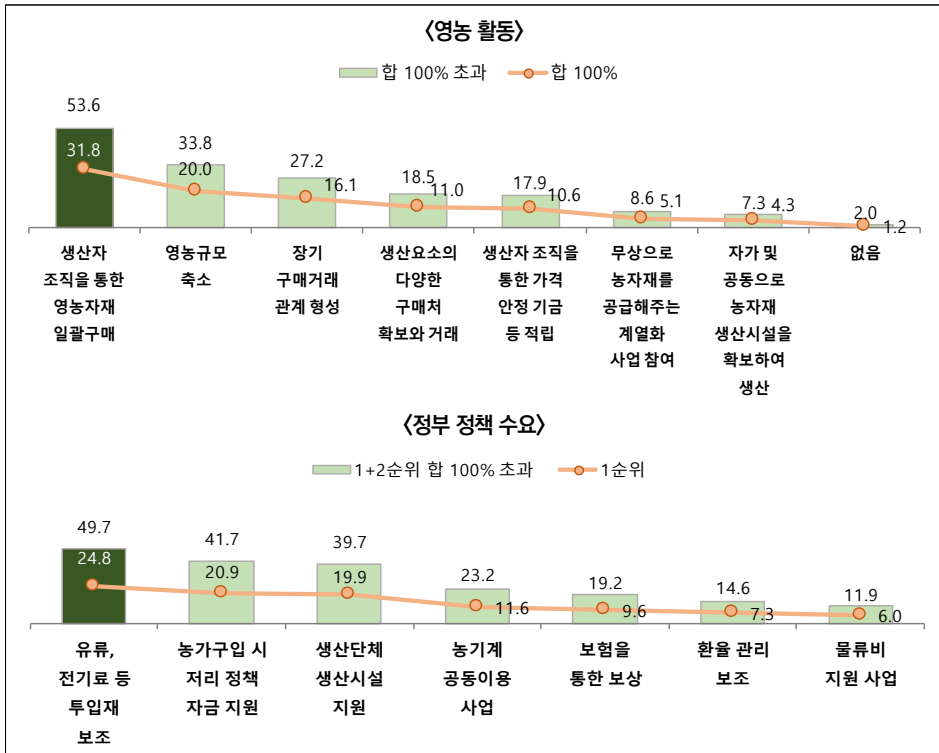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영농 활동의 종류와 필요한 정부 정책 수요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에 대한 응답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생산자 조직을 통한 영농자재 일괄구매'가 53.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규모 축소' 33.8%, '장기 구매 거래관계 형성' 27.2%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3>.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 수요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유류, 전기료 등 투입재 보조'가 4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 구입 시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 41.7%, '생산단체 생산시설 지원' 39.7% 순으로 높다<그림 1-13>.

〈그림 1-13〉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정부 정책 수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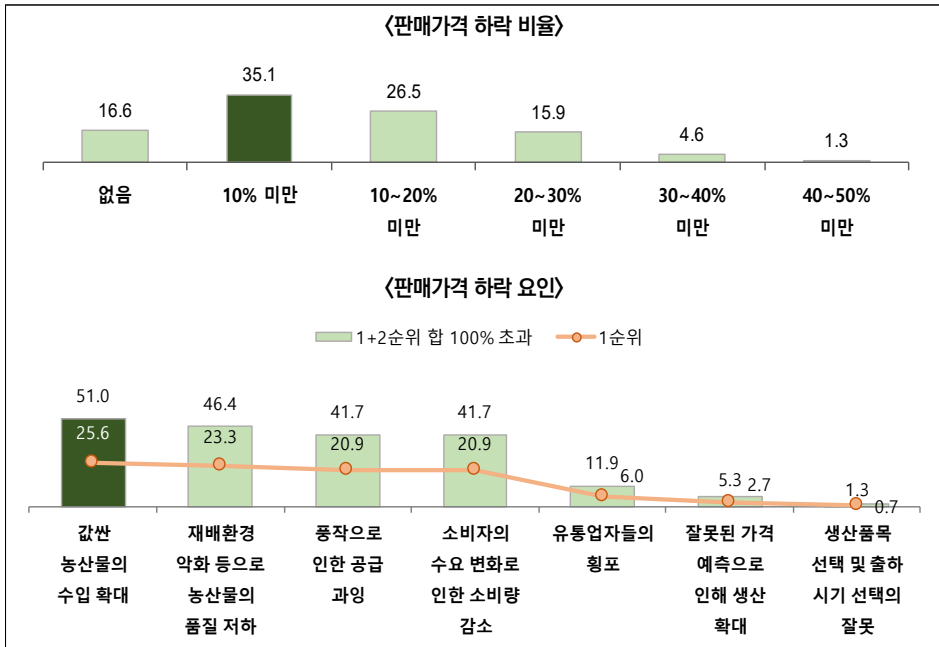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벼(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험과 관련 위험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해,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3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이 26.5%, ‘20~30% 미만’이 15.9% 등의 순으로 높다.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값싼 농산물의 수입 확대’가 51.0%, ‘재배환경 악화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46.4%,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과 ‘소비자의 수요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가 각각에서 41.7% 순으로 높다<그림 1-14>.

〈그림 1-14〉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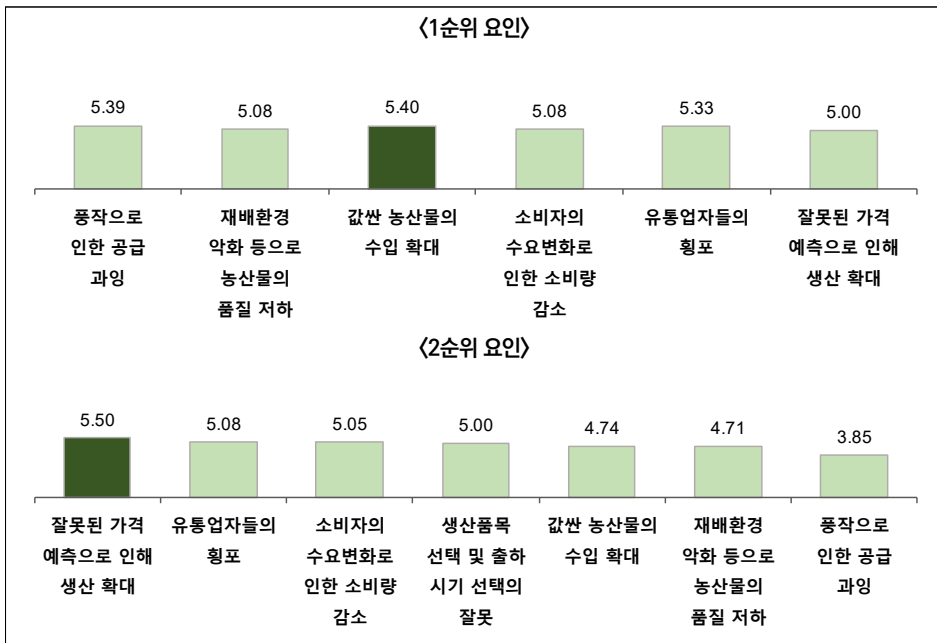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 주요인의 영향력을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해 1순위 요인으로 ‘값싼 농산물의 수입 확대’가 5.40점, 다음으로는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5.39점, ‘유통업자들의 횡포’ 5.33점 순으로 높다<그림 1-15>. 2순위 요인으로, ‘잘못된 가격 예측으로 인해 생산 확대’가 5.50점으로 가장 높고, ‘유통업자들의 횡포’ 5.08점, ‘소비자의 수요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 5.05점 순으로 높다<그림 1-15>.

〈그림 1-15〉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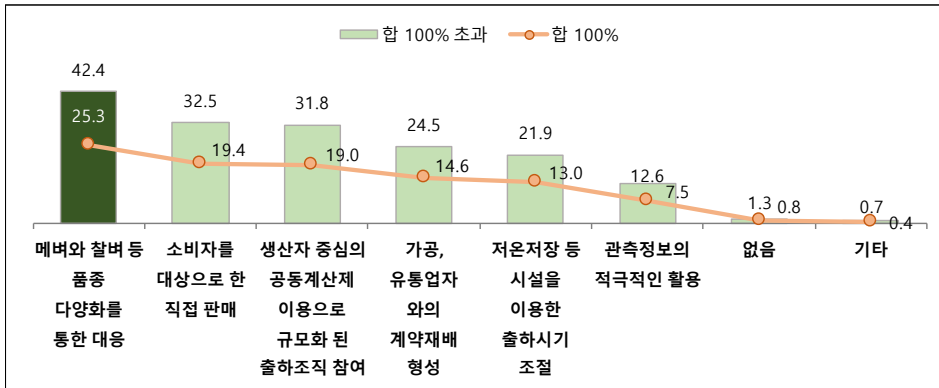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를 통한 대응’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 32.5%, ‘생산자 중심의 공동계산제 이용으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참여’ 31.8%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16>. 합 100% 기준으로 보면, ‘메벼와 찰벼 등 품종 다양화를 통한 대응’이 2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 19.4%, ‘생산자 중심의 공동계산제 이용으로 규모화된 출하조직 참여’ 19.0% 순으로 높다<그림 1-16>.

〈그림 1-16〉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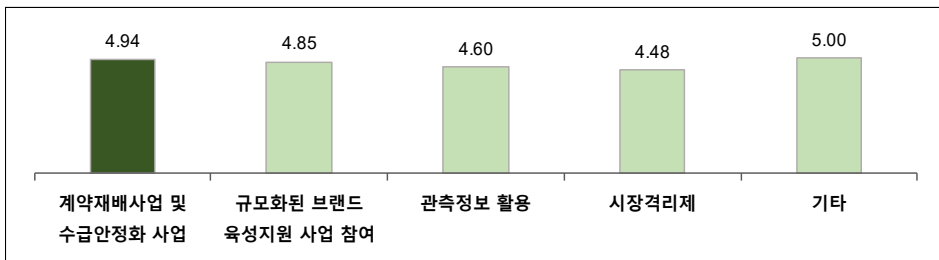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안정화 사업’이 4.9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4.85점, ‘관측정보 활용’ 4.60점, ‘시장격리제’ 4.48점 순으로 높다<그림 1-17>.

〈그림 1-17〉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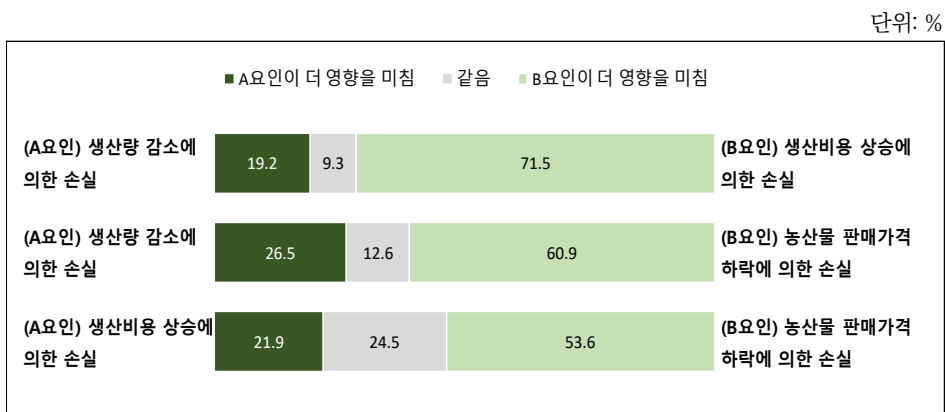
주: N=15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업 경영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다. 이들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의 영향력의 대

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에 대한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그림 1-18>.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이 71.5%로 더 높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60.9%로 더 높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53.6%로 더 높다.

〈그림 1-18〉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주: N=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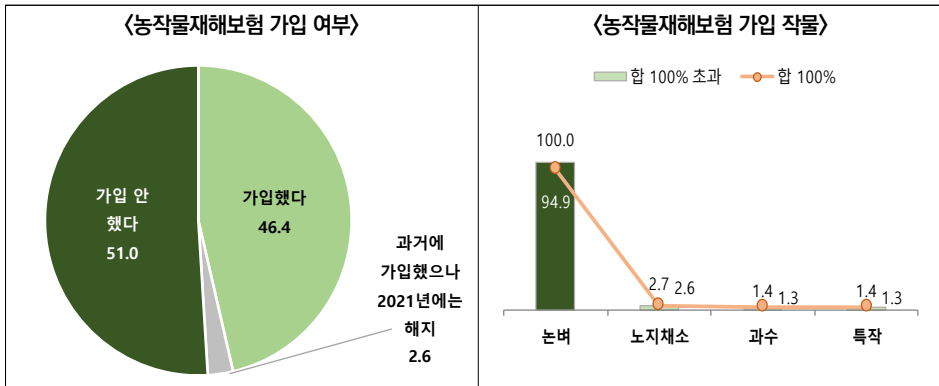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2.3. 농가경영 관련 보험 수요

2021년 시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작물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가입’이 46.4%, ‘미가입’이 51.0%, ‘과거에 가입했으나 2021년에는 해지’가 2.6%이다<그림 1-19>.

〈그림 1-1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작물

단위: %



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N=15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작물'은 n=7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한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률을 농가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북이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충남/대전/세종이 60.9%, 전북이 57.9%, 전남/광주가 47.8% 등의 순으로 높다<표 1-5>. 영농경력 20년 미만 농가의 가입률은 60%이며, 20년 이상 농가의 가입률은 43.7%다. 조수입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다. 응답자 연령이 60세 미만일 경우 가입률이 56%이며,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작물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논벼'가 1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노지채소' 2.7%, '과수', '특작' 각각에서 1.4% 순으로 높다<그림 1-19>.

〈표 1-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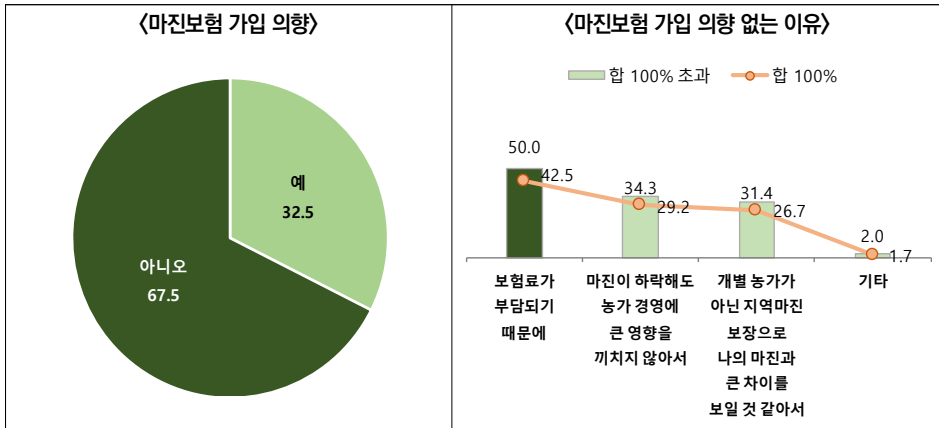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가입했다	과거에 가입했으나 2021년에는 해지	가입 안 했다
[전체]		151	46.4	2.6	51.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1	33.3	0.0	66.7
	충남/대전/세종	23	60.9	4.3	34.8
	충북	13	61.5	0.0	38.5
	전북	19	57.9	10.5	31.6
	전남/광주	23	47.8	4.3	47.8
	대구/경북	21	42.9	0.0	57.1
	부산/울산/경남	20	35.0	0.0	65.0
	강원	11	27.3	0.0	72.7
영농경력	20년 미만	25	60.0	4.0	36.0
	20년 이상	126	43.7	2.4	54.0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80	35.0	1.3	63.8
	2천만~5천만 원 미만	50	52.0	4.0	44.0
	5천만 원 이상	21	76.2	4.8	19.0
성별	남성	117	52.1	3.4	44.4
	여성	34	26.5	0.0	73.5
연령대	60세 미만	25	56.0	8.0	36.0
	60대	58	53.4	0.0	46.6
	70대 이상	68	36.8	2.9	60.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벼(쌀) 가격 하락과 투입재 비용 상승으로 마진의 감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진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보조 수준(50%)의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예’가 32.5%, ‘아니오’가 67.5%였다<그림 1-20>.

〈그림 1-20〉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단위: %



주: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N=151, '마진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102(의향 없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지역별로 가입 의향 비율을 살펴보면, 전북이 4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강원도가 45.5%, 충남/대전/세종이 43.5%, 전남/광주가 34.8% 등의 순으로 높다 <표 1-6>. 영농경력 20년 미만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은 44%이며, 20년 이상 농가의 가입 의향은 30.2%다. 조수입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고, 응답자 연령으로 보면 60대가 가입 의향 비율이 43.1%로 가장 높다.

〈표 1-6〉 마진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51	32.5	67.5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1	14.3	85.7
	충남/대전/세종	23	43.5	56.5
	충북	13	23.1	76.9
	전북	19	47.4	52.6
	전남/광주	23	34.8	65.2
	대구/경북	21	19.0	81.0
	부산/울산/경남	20	35.0	65.0
	강원	11	45.5	54.5
영농경력	20년 미만	25	44.0	56.0
	20년 이상	126	30.2	69.8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80	17.5	82.5
	2천만~5천만 원 미만	50	42.0	58.0
	5천만 원 이상	21	66.7	33.3
성별	남성	117	37.6	62.4
	여성	34	14.7	85.3
연령대	60세 미만	25	40.0	60.0
	60대	58	43.1	56.9
	70대 이상	68	20.6	79.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 부담’이 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마진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34.3%, ‘개별 농가가 아닌 지역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31.4% 순으로 높다<그림 1-20>.

거부 이유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구/경북(76.5%), 부산/울산/경남(84.6%), 강원(50%) 지역 응답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표 1-7>. 서울/경기/인천(72.2%), 충남/대전/세종(38.5%) 응답자들은 마진 하락의 농가에 대한 미미한 영향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역마진을 기준으로 한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이유로

거부하는 비율이 높다.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높다. 조수입 2천만 원 미만의 농가는 보험료 부담(56.1%), 2천만~5천만 원의 농가는 지역마진 보장(48.3%), 5천만 원 이상의 농가는 보험료 부담(42.9%)을 거부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와 가입 거부 이유 사이에 특별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는다.

〈표 1-7〉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마진(소득)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개별 농가 마진 보장이 아닌 지역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02	50.0	34.3	31.4	2.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8	55.6	72.2	11.1	0.0
	충남/대전/세종	13	30.8	38.5	30.8	0.0
	충북	10	30.0	10.0	60.0	0.0
	전북	10	10.0	20.0	70.0	0.0
	전남/광주	15	40.0	20.0	40.0	0.0
	대구/경북	17	76.5	23.5	5.9	0.0
	부산/울산/경남	13	84.6	46.2	46.2	0.0
	강원	6	50.0	16.7	0.0	33.3
영농 경력	20년 미만	14	50.0	35.7	28.6	0.0
	20년 이상	88	50.0	34.1	31.8	2.3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66	56.1	39.4	24.2	1.5
	2천만~5천만 원 미만	29	37.9	24.1	48.3	3.4
	5천만 원 이상	7	42.9	28.6	28.6	0.0
성별	남성	73	47.9	35.6	34.2	1.4
	여성	29	55.2	31.0	24.1	3.4
연령대	60세 미만	15	46.7	26.7	26.7	6.7
	60대	33	33.3	33.3	36.4	3.0
	70대 이상	54	61.1	37.0	29.6	0.0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은 정부 지원으로 농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매년 예금하고, 자연재해나 가격 하락으로 농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 농가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을 묻는 설문 에 대해 응답자들은 ‘예’ 28.5%, ‘아니오’ 71.5%로 응답하였다<표 1-8>.

〈표 1-8〉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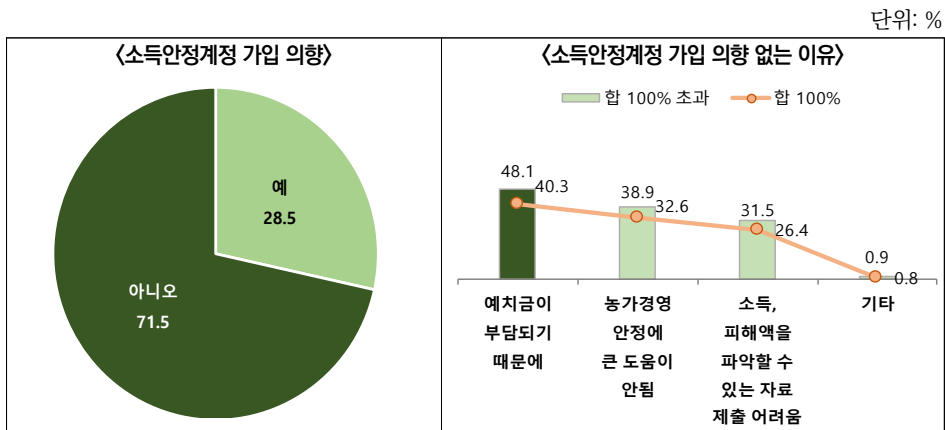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51	28.5	71.5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1	4.8	95.2
	충남/대전/세종	23	43.5	56.5
	충북	13	7.7	92.3
	전북	19	52.6	47.4
	전남/광주	23	43.5	56.5
	대구/경북	21	23.8	76.2
	부산/울산/경남	20	10.0	90.0
	강원	11	36.4	63.6
영농경력	20년 미만	25	36.0	64.0
	20년 이상	126	27.0	73.0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80	15.0	85.0
	2천만~5천만 원 미만	50	46.0	54.0
	5천만 원 이상	21	38.1	61.9
성별	남성	117	31.6	68.4
	여성	34	17.6	82.4
연령대	60세 미만	25	44.0	56.0
	60대	58	34.5	65.5
	70대 이상	68	17.6	82.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 비율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대전/세종 및 전남/광주에서 가입 의향 비율이 43.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표 1-8>.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이 36%로, 20년 이상의 농가(27%)보다 다소 높다. 조수입은 2천만~5천만 원 미만의 농가에서 가입 의향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다.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예치금 부담’이 48.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됨’ 38.9%, ‘소득,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어려움’ 31.5% 순으로 높다<그림 1-21>.

〈그림 1-21〉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151,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108(의향 없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에서는 예치금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고, 충북에서는 예치금 부담과 자료 제출, 전북에서는 예치금 부담 및 자료제출 부담, 전남/광주에서는 농가경영에 도움 안 됨(불필요) 등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표 1-9>.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농가에서 소득안정계정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5%), 20년 이상의 농가는 예치금 부담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다(40.4%). 조수입 2천만 원 미만의 농가는 예치금 부담, 5천만 원 이상의 농가는 예치금 부담과 불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 응답자 연령에 관계없이 예치금 부담을 가입 거부의 결정적인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1-9〉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108	40.3	32.6	26.4	0.8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20	60.0	30.0	10.0	0.0
	충남/대전/세종	13	30.8	30.8	38.5	0.0
	충북	12	50.0	0.0	50.0	0.0
	전북	9	40.0	10.0	50.0	0.0
	전남/광주	13	15.4	53.8	30.8	0.0
	대구/경북	16	31.3	12.5	56.3	0.0
	부산/울산/경남	18	35.7	57.1	7.1	0.0
	강원	7	42.9	42.9	0.0	14.3
영농 경력	20년 미만	16	40.0	45.0	15.0	0.0
	20년 이상	92	40.4	30.3	28.4	0.9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68	40.0	28.8	31.3	0.0
	2천만~5천만원미만	27	36.7	33.3	26.7	3.3
	5천만 원 이상	13	47.4	47.4	5.3	0.0
성별	남성	80	38.9	34.7	25.3	1.1
	여성	28	44.1	26.5	29.4	0.0
연령대	60세 미만	14	50.0	28.6	21.4	0.0
	60대	38	39.6	31.3	27.1	2.1
	70대 이상	56	38.8	34.3	26.9	0.0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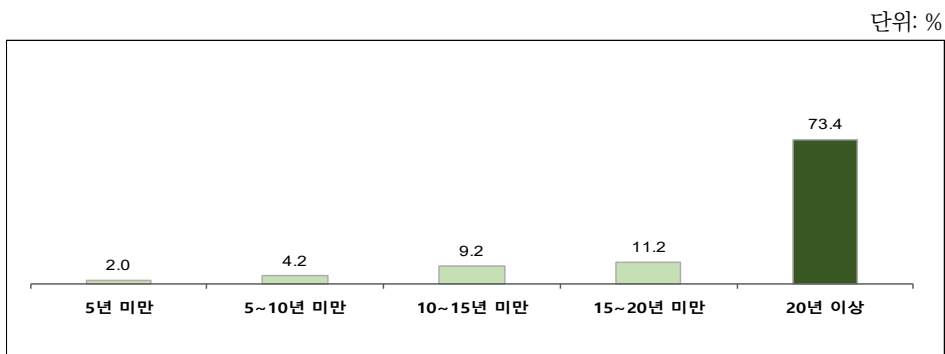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 과수 및 채소 조사 결과

3.1. 영농경력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7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5~20년 미만’ 11.2%, ‘10~15년 미만’ 9.2% 순으로 높다<그림 1-22>.

〈그림 1-22〉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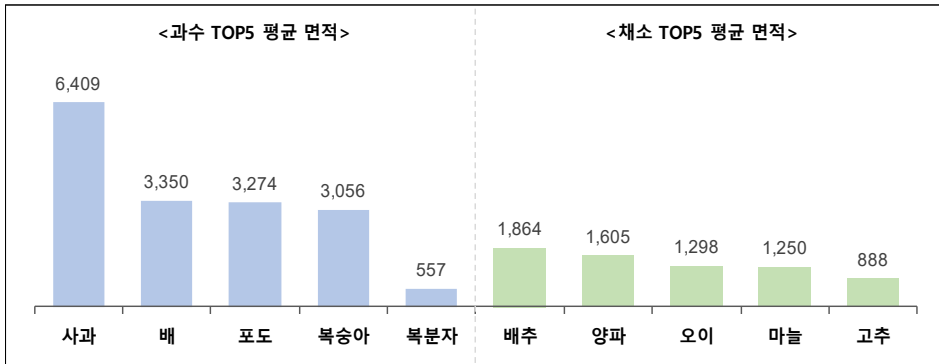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총재배면적은 과수의 경우 ‘사과’가 6,409평으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배’ 3,350평, ‘포도’ 3,274평 순으로 넓다<그림 1-23>. 채소의 경우 ‘배추’가 1,864평으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는 ‘양파’ 1,605평, ‘오이’ 1,298평 순으로 넓다<그림 1-23>.

〈그림 1-23〉 재배품목별 면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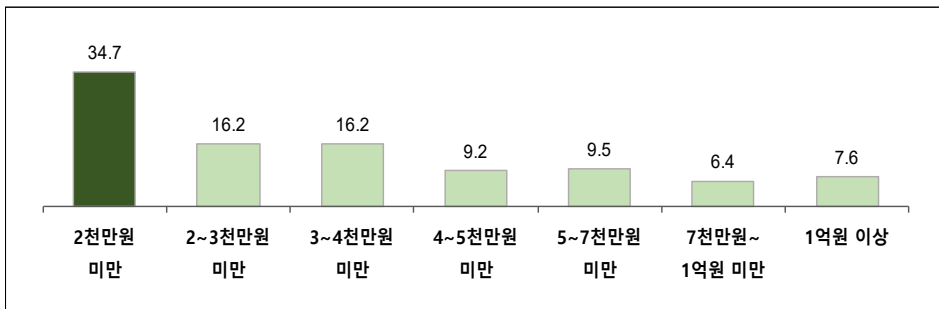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재배 농산물 총 판매액(조수입) 비율은 ‘2천만 원 미만’이 3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천만~3천만 원 미만’과 ‘3천만~4천만 원 미만’이 각각 16.2%, ‘5천만~7천만 원 미만’이 9.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24>.

〈그림 1-24〉 조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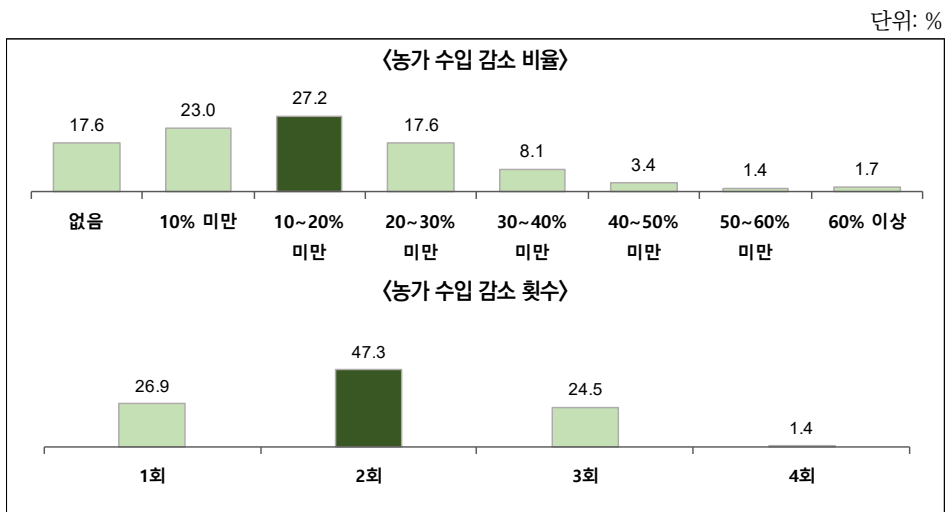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2. 농가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농가 수입이 정상적인 수준(5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험 및 횟수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 미만’이 2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23.0%, ‘20~30% 미만’ 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음’이 17.6%를 차지한다<그림 1-25>. 농가 수입이 감소한 횟수를 보면, ‘2회’가 47.3%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26.9%, ‘3회’ 24.5% 순으로 높다<그림 1-25>.

〈그림 1-25〉 농가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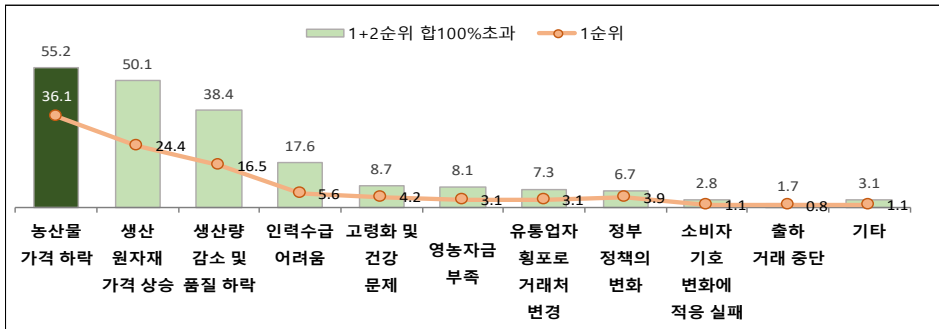
주: ‘농가 수입 감소 비율’은 N=357, ‘농가 수입 감소 횟수’는 n=294(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가 수입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설문의 응답에 대해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이 5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 50.1%,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38.4% 순으로 높다<그림 1-26>. 1순위 기준으로 보면, ‘농산물 가격 하락’이 3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이 24.4%,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이 16.5% 순으로 높다<그림 1-26>.

〈그림 1-26〉 농가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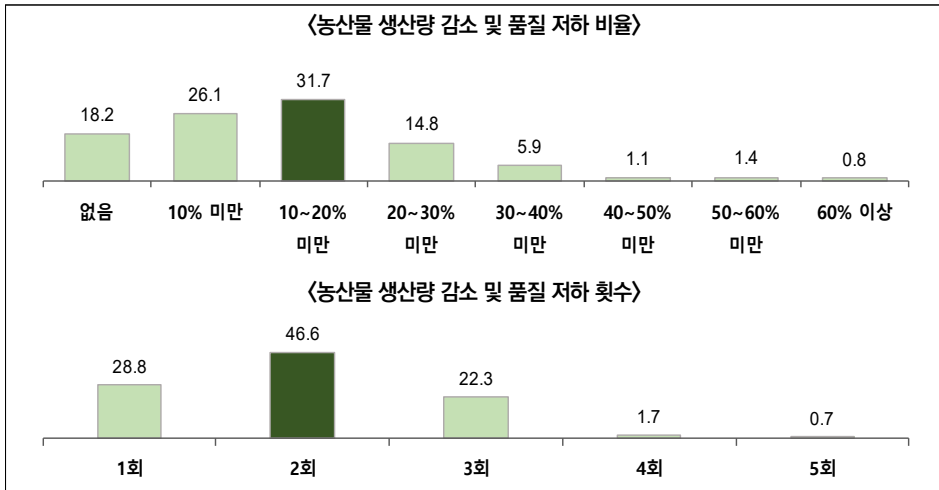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생산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 미만’이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26.1%, ‘20~30% 미만’ 14.8% 순으로 높다. ‘없음’은 18.2%를 차지한다<그림 1-2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2회’가 4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28.8%, ‘3회’ 22.3% 순으로 높다<그림 1-27>.

〈그림 1-2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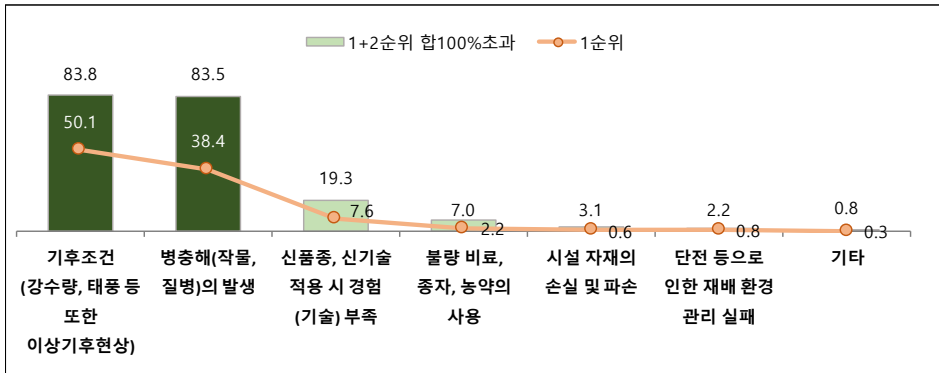
주: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357,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292(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기후조건’이 8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발생’ 83.5%, ‘신품종, 신기술 적용 시 경험(기술) 부족’ 19.3% 순으로 높다<그림 1-28>. 1순위 기준으로 보면, ‘기후조건’이 50.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 발생’ 38.4%, ‘신품종, 신기술 적용 시 경험(기술) 부족’ 7.6% 순으로 높다<그림 1-28>.

〈그림 1-28〉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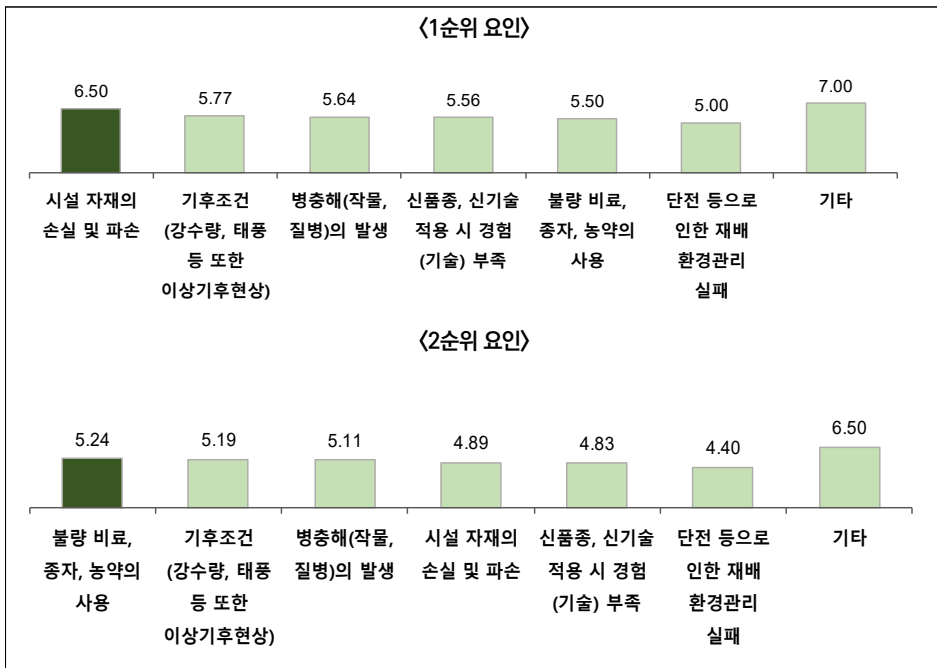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7점 만점)에 대해 1순위 요인 응답 점수는 ‘시설자재의 손실 및 파손’이 6.5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후조건’이 5.77점, ‘병충해(작물, 질병)의 발생’이 5.64점 순으로 높다 <그림 1-29>. 2순위 요인은 ‘불량 비료, 종자, 농약의 사용’이 5.2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후조건’이 5.19점, ‘병충해(작물, 질병)의 발생’ 5.11점 순으로 높다 <그림 1-29>.

〈그림 1-29〉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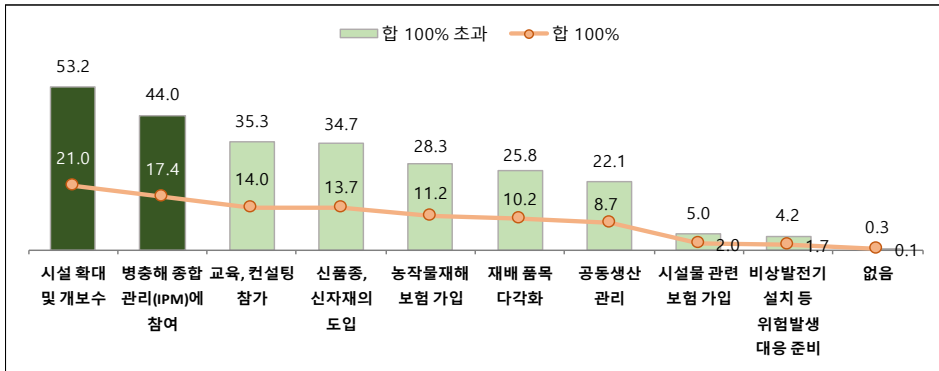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시설 확대 및 개보수’가 5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종합관리(IPM)에 참여’ 44.0%, ‘교육, 컨설팅 참가’ 35.3% 순으로 높다<그림 1-30>. 합 100% 기준으로 보면, ‘시설 확대 및 개보수’가 2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병충해종합관리(IPM)에 참여’ 17.4%, ‘교육, 컨설팅 참가’ 14.0% 순으로 높다<그림 1-30>.

〈그림 1-30〉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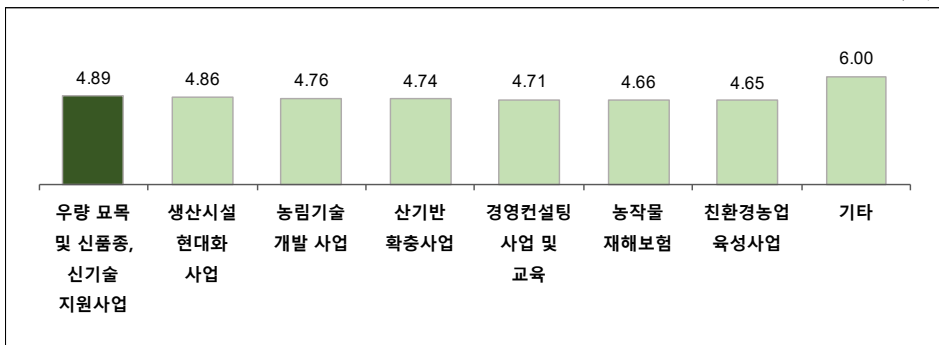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5점 만점)에 대한 응답 점수는 ‘우량 묘목 및 신품종, 신기술 지원 사업’이 4.8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86점, ‘농림 기술 개발 사업’ 4.76점 순으로 높다<그림 1-31>.

〈그림 1-31〉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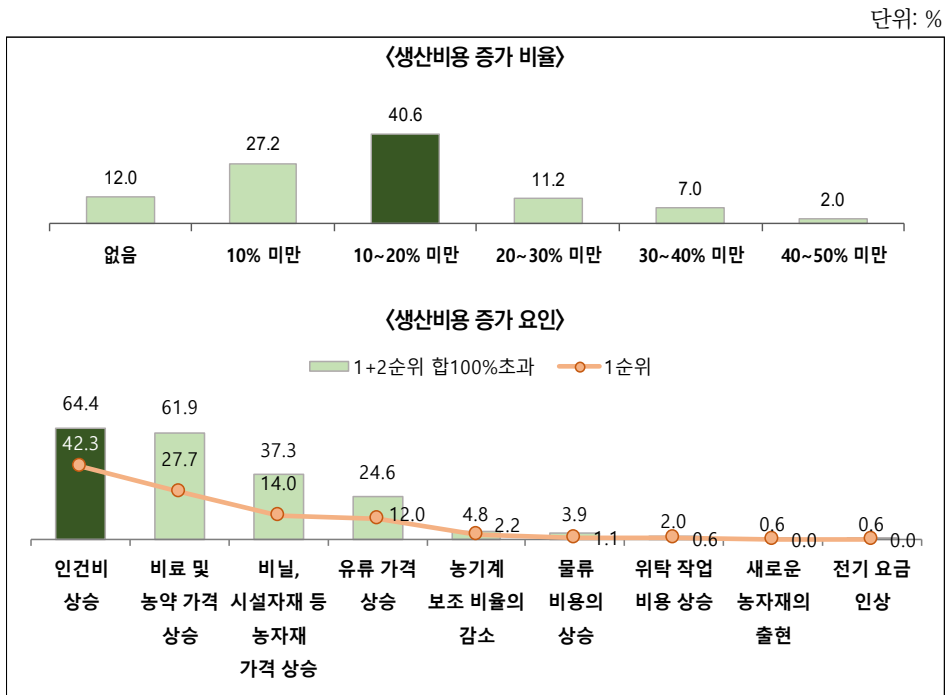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와 생산비용 증가 최고 비율을 묻는 설문에서, 생산비용 증가 비율에 대한 응답은 ‘10~20% 미만’이

4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27.2%, ‘20~30% 미만’ 11.2% 순으로 높다<그림 1-32>.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6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61.9%, ‘비닐, 시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37.3% 순으로 높다<그림 1-32>.

〈그림 1-32〉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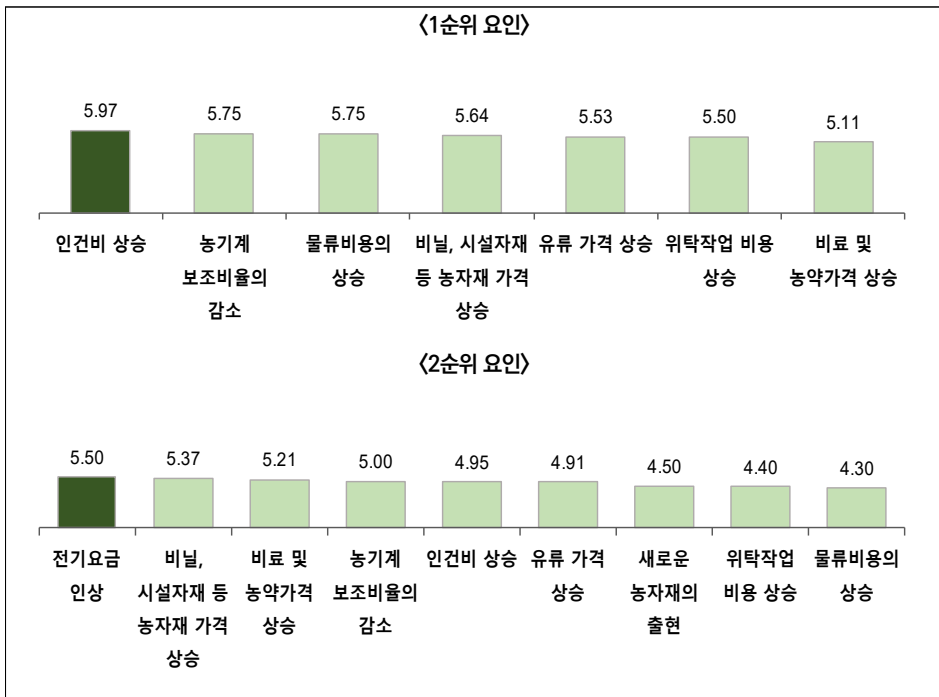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을 요인별로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1순위 요인의 경우 ‘인건비 상승’이 5.9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기계 보조비율의 감소’, ‘물류비용의 상승’이 각각 5.75점, ‘비닐, 시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 5.64점 순으로 높다<그림 1-33>. 2순위 요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5.5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비닐, 시설자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이 5.37점,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이 5.21점 순으로 높다<그림 1-33>.

〈그림 1-33〉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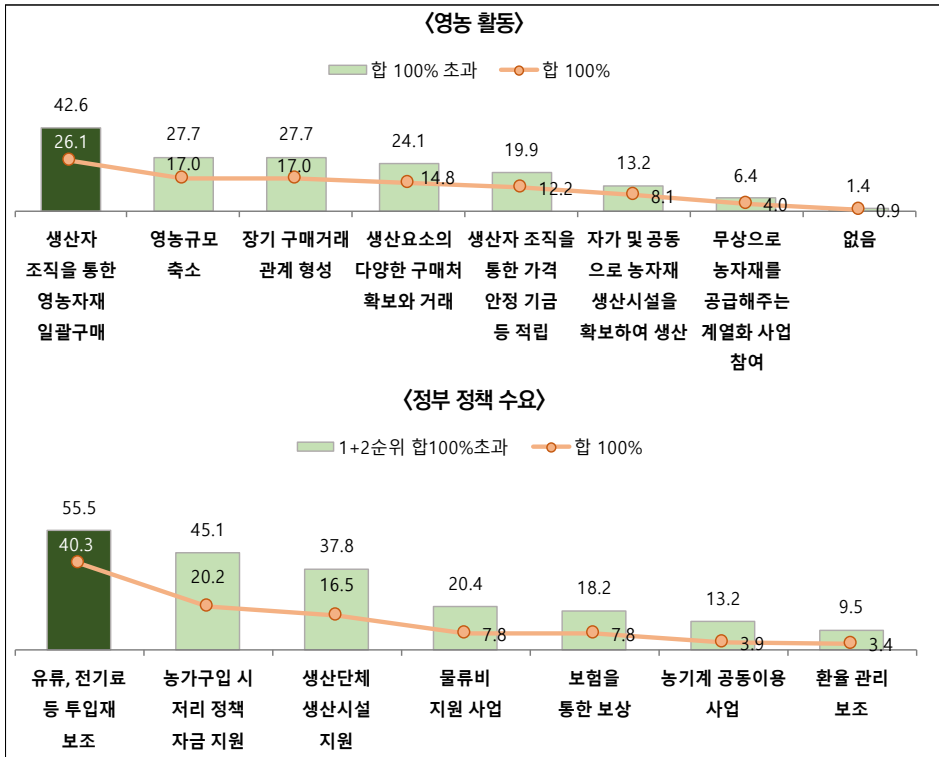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을 증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영농 활동의 종류와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생산자 조직을 통한 영농자재 일괄구매’가 4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 규모 축소’, ‘장기 구매 거래관계 형성’이 각각 27.7%, ‘생산요소의 다양한 구매처 확보와 거래’ 24.1% 순으로 높다<그림 1-34>.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요를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유류, 전기료 등 투입재 보조’가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 구입 시 저리 정책자금 지원’ 45.1%, ‘생산단체 생산시설 지원’ 37.8% 순으로 높다<그림 1-34>.

〈그림 1-34〉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정부 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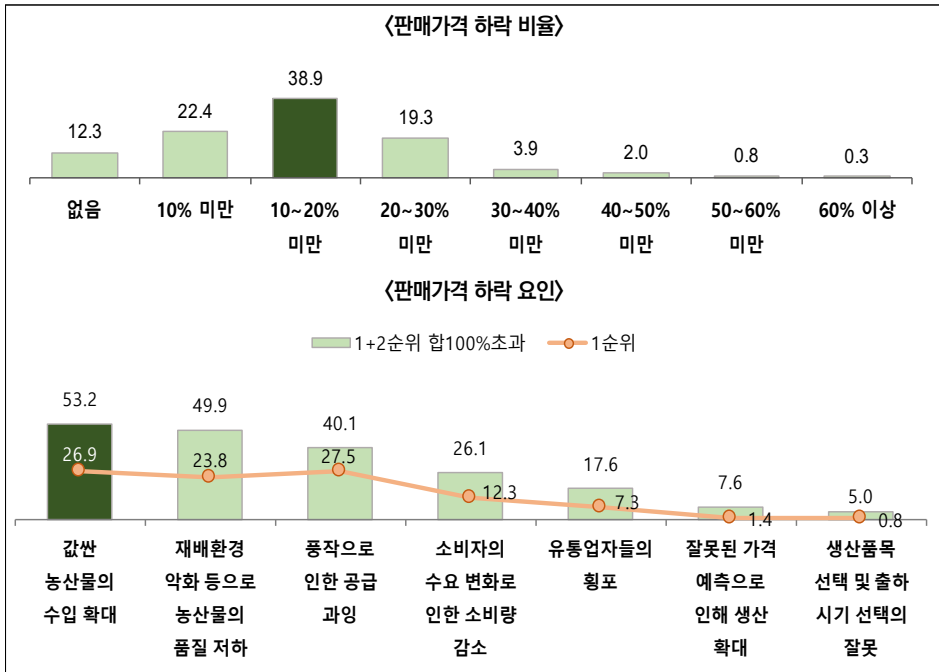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경험과 관련 위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 미만’이 3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22.4%, ‘20~30% 미만’ 19.3% 순으로 높다 <그림 1-35>.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값싼 농산물의 수입 확대’ 53.2%, ‘재배환경 악화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 저하’ 49.9%,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40.1% 순으로 높다 <그림 1-35>.

〈그림 1-35〉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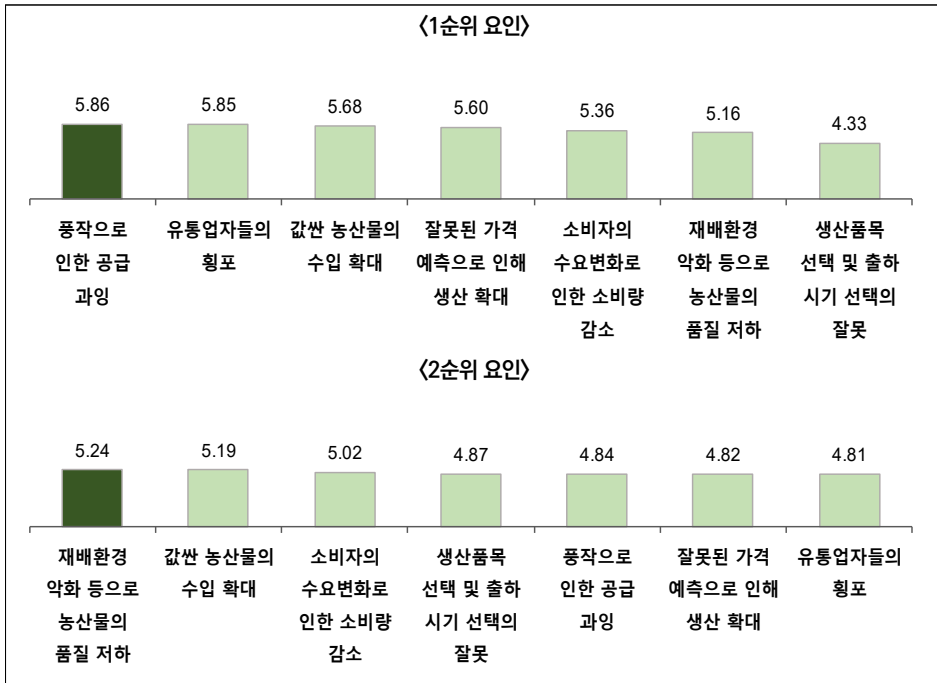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 주요인의 영향력을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1순위 요인은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5.8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유통업자들의 횡포’ 5.85점, ‘값싼 농산물의 수입 확대’ 5.68점 순으로 높다<그림 1-36>. 2순위 요인은, ‘재배환경 악화 등으로 농산물의 품질 저하’가 5.2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값싼 농산물의 수입 확대’ 5.19점, ‘소비자의 수요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 5.02점 순으로 높다<그림 1-36>.

〈그림 1-36〉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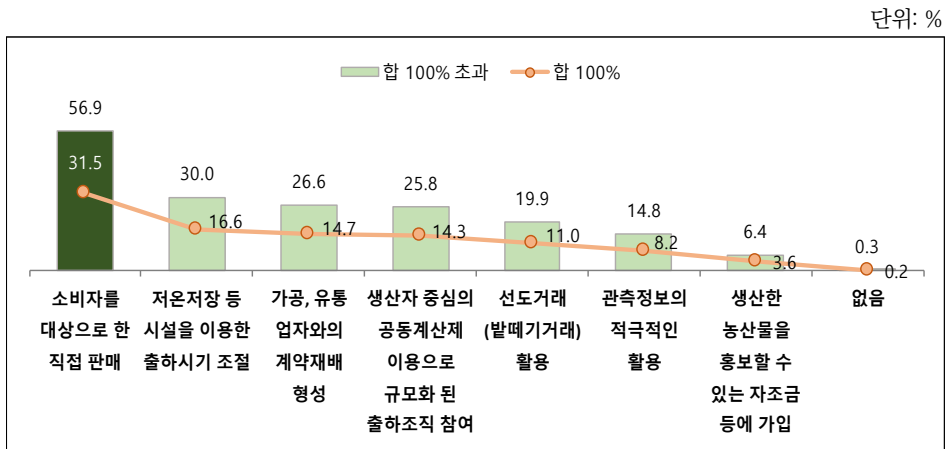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영농 활동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가 5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저온저장 등 시설을 이용한 출하시기 조절’ 30.0%, ‘가공, 유통업자와의 계약재배 형성’ 26.6% 순으로 높다<그림 1-37>. 합 100%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가 3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저온저장 등 시설을 이용한 출하시기 조절’이 16.6%, ‘가공, 유통업자와의 계약재배 형성’이 14.7% 순으로 높다<그림 1-37>.

〈그림 1-37〉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영농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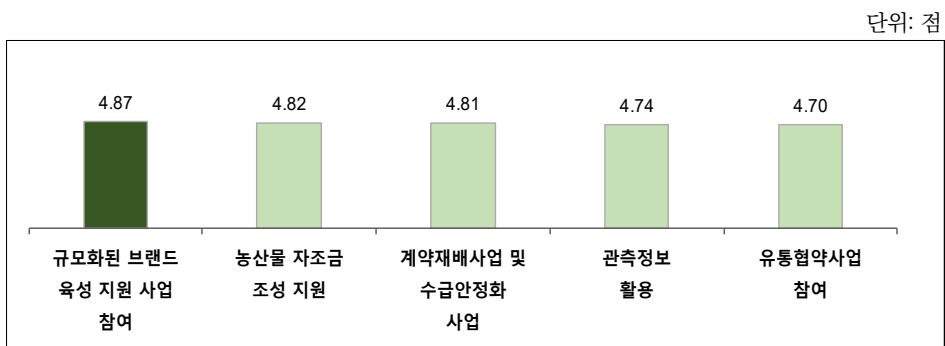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가 4.8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이 4.82점,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이 4.81점 순으로 높다<그림 1-38>.

〈그림 1-38〉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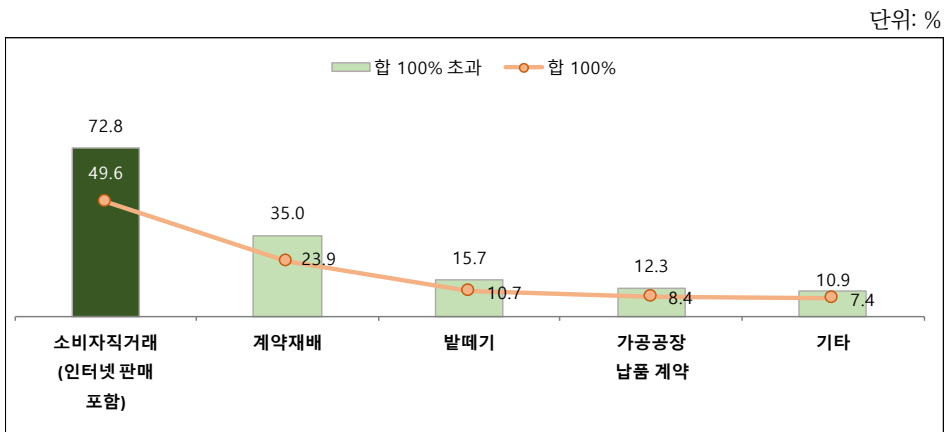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계약한 거래관계의 종류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직거래(인터넷 판매 포함)’가 7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계약재배’ 35.0%, ‘발떼기’ 15.7% 순으로 높다<그림 1-39>. 합 100%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직거래(인터넷 판매 포함)’가 49.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계약재배’ 23.9%, ‘발떼기’ 10.7% 순으로 높다<그림 1-39>.

〈그림 1-39〉 거래관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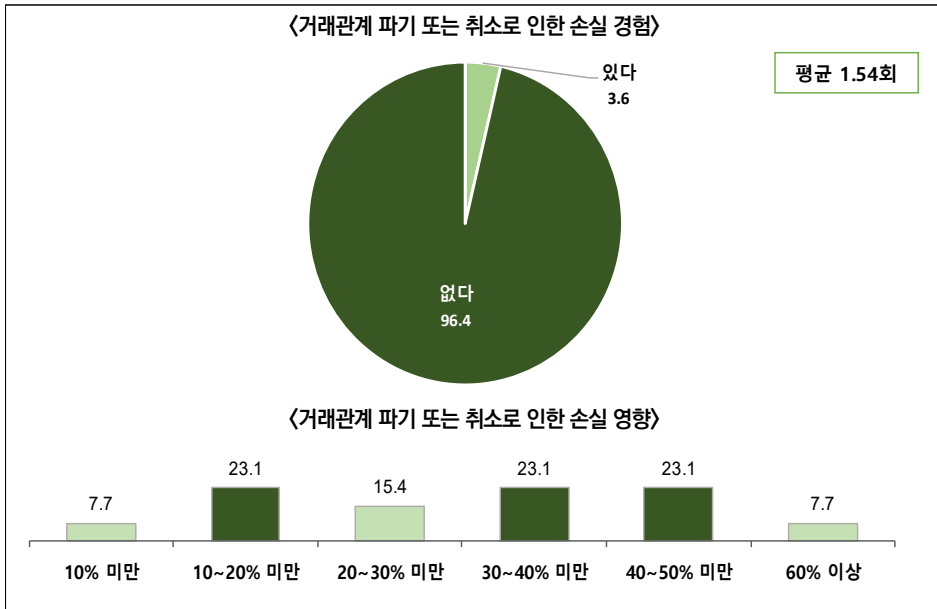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계약한 거래관계의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손실 경험이 ‘있다’가 3.6%, ‘없다’가 96.4%이며, 유경험의 경우 평균 횟수는 1.54회이다<그림 1-40>.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영향력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이 각각 2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30% 미만’이 15.4%이다<그림 1-40>.

〈그림 1-40〉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경험/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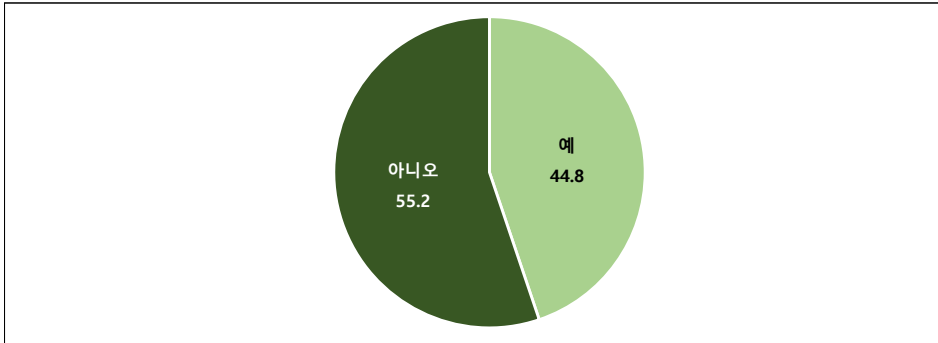
주: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경험’은 N=357,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영향’은 n=13(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 유경험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발떼기) 등의 거래방식이 판매가격 변동의 위험을 감소시켰는지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예’가 44.8%, ‘아니오’가 55.2%였다<그림 1-41>.

〈그림 1-41〉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로 인한 농가판매가격 변동 위험 완화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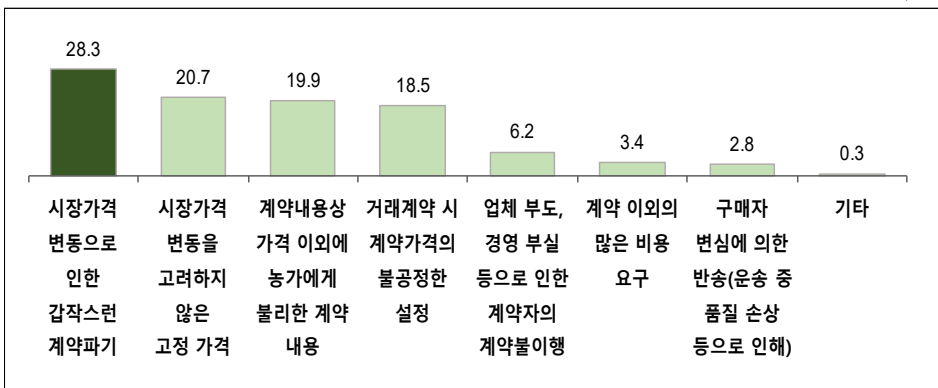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발매기) 등의 파기 또는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를 묻는 설문
에 대한 응답 비율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가 2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장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 가격’이 20.7%, ‘계약
내용상 가격 이외에 농가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이 19.9% 순으로 높다<그림 1-42>.

〈그림 1-42〉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가 파기 또는 취소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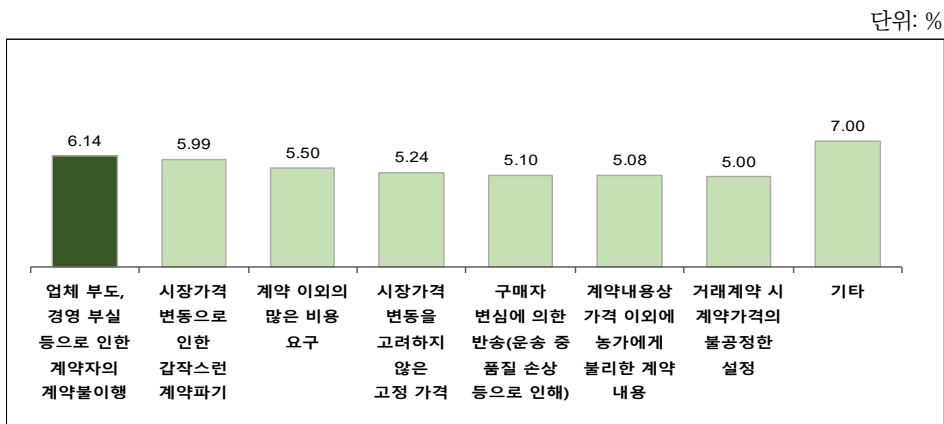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발떼기) 등의 파기 또는 취소가 농가 수입에 미친 영향력을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해 ‘업체 부도, 경영 부실 등으로 인한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 6.1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계약파기’가 5.99점, ‘계약 이외의 많은 비용 요구’가 5.50점 순으로 높다<그림 1-43>.

〈그림 1-43〉 거래관계 파기 또는 취소로 인해 농가수입에 미친 영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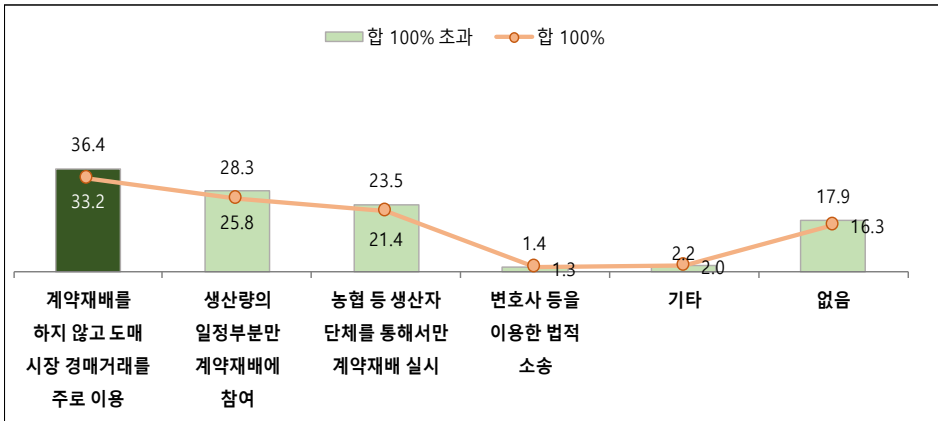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발떼기) 등의 파기 또는 취소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영농 활동 경험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도매시장 경매거래를 주로 이용한다’가 36.4%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계약재배에 참여’ 28.3%,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만 계약재배 실시’ 23.5%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44>.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계약재배를 하지 않고 도매시장 경매거래를 주로 이용’이 3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량의 일정 부분만 계약재배에 참여’ 25.8%,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만 계약재배 실시’ 21.4% 순으로 높다<그림 1-44>.

〈그림 1-44〉 계약재배 및 선도거래의 파기 또는 취소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영농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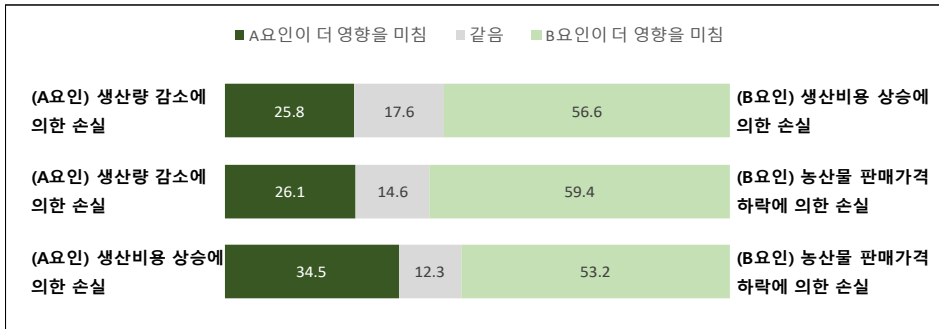
주: N=35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양한 요인이 농업 경영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의 영향력의 대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의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그림 1-45>.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이 56.6%로 더 높다.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59.4%로 더 높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53.2%로 더 높다.

〈그림 1-45〉 농업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단위: %



주: N=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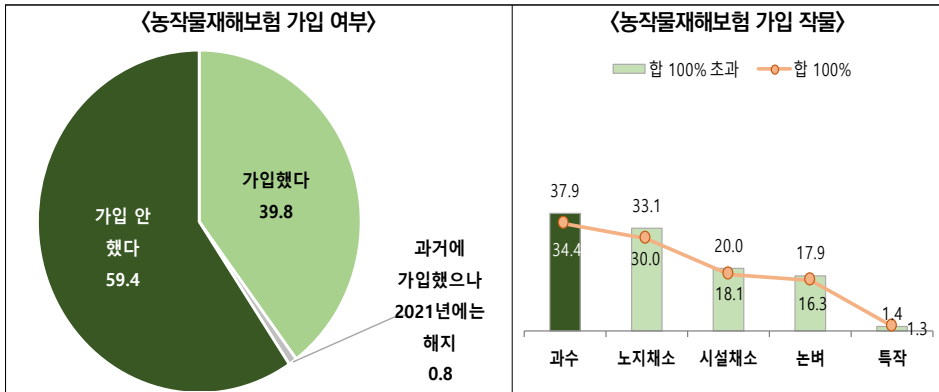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3.3. 농가경영 관련 보험 수요

2021년 시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작물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가입’이 39.8%, ‘미가입’이 59.4%, ‘과거에 가입했으나 2021년에는 해지’가 0.8%로 나타났다<그림 1-46>.

〈그림 1-46〉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작물

단위: %



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N=357,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작물'은 n=145(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의 가입률은 55%, 채소 농가의 가입률은 33.9%로, 과수 농가의 가입률이 더 높다<표 1-10>. 지역별 가입률은 충남/대전/세종의 경우 8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청북이 64.5%, 전남/광주가 51%, 전북이 44.1%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인 농가(43.2%)가 20년 이상인 농가(38.5%)보다 가입률이 높다. 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가입률이 28.2%에 불과하지만, 그 이상이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60세 미만 응답자 농가의 가입률은 49%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

〈표 1-10〉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입했다	과거에 가입했으나 2021년에는 해지	가입 안 했다
[전체]		357	39.8	0.8	59.4
세부 영농형태	과수	100	55.0	2.0	43.0
	채소	257	33.9	0.4	65.8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6	28.3	0.0	71.7
	충남/대전/세종	41	82.9	2.4	14.6
	충북	31	64.5	0.0	35.5
	전북	34	44.1	2.9	52.9
	전남/광주	51	51.0	2.0	47.1
	대구/경북	62	29.0	0.0	71.0
	부산/울산/경남	56	23.2	0.0	76.8
	강원	36	8.3	0.0	91.7
영농경력	20년 미만	95	43.2	1.1	55.8
	20년 이상	262	38.5	0.8	60.7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124	28.2	0.8	71.0
	2~3천만 원 미만	58	46.6	0.0	53.4
	3천만~4천만 원 미만	58	46.6	1.7	51.7
	4천만~5천만 원 미만	33	45.5	0.0	54.5
	5천만~7천만 원 미만	34	44.1	2.9	52.9
	7천만~1억 원 미만	23	52.2	0.0	47.8
	1억 원 이상	27	40.7	0.0	59.3
성별	남성	188	46.8	0.5	52.7
	여성	169	32.0	1.2	66.9
연령대	60세 미만	102	49.0	1.0	50.0
	60대	161	46.0	0.0	54.0
	70대 이상	94	19.1	2.1	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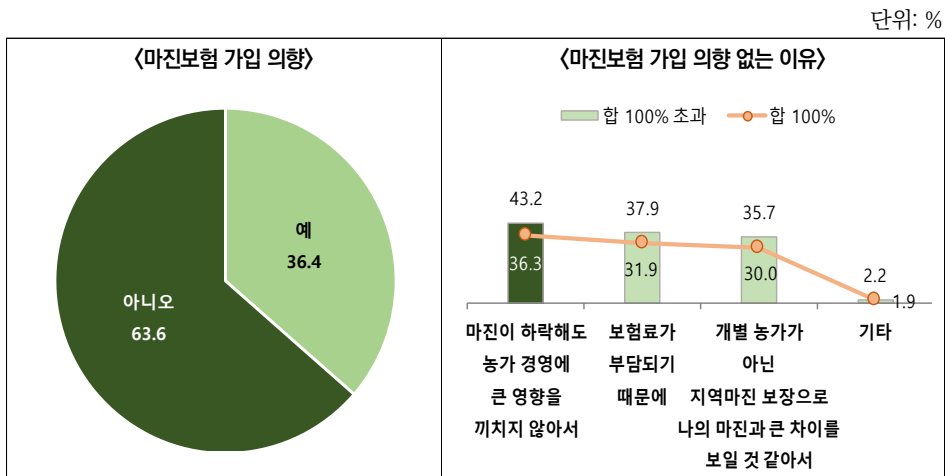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작물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과수’가 3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노지채소’ 33.1%, ‘시설채소’ 20.0% 순으로 높다<그림 1-46>.

작물가격 하락과 투입재 비용 상승으로 마진 감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진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보조 수준(50%)의 자부담을 납부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예’가 36.4%, ‘아니오’가 63.6%의 비율로 응답하였다<그림 1-47>.

〈그림 1-47〉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N=357, '마진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227(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와 채소 농가 모두 ‘예’가 50%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1-11>.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3.9%로 가입 의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충남/대전/세종이 51.2%, 전남/광주가 49%, 전북이 35.3%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가입 의향 비율은 40% 미만이다. 조수입이 5천만~7천만 원 미만의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이 5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천만~4천만 원 미만의 농가가 48.3%, 1억 원 이상의 농가가 44.4% 등의 순으로 높다. 또한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은 낮다.

〈표 1-11〉 마진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57	36.4	63.6
세부 영농형태	과수	100	45.0	55.0
	채소	257	33.1	66.9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6	26.1	73.9
	충남/대전/세종	41	51.2	48.8
	충북	31	16.1	83.9
	전북	34	35.3	64.7
	전남/광주	51	49.0	51.0
	대구/경북	62	29.0	71.0
	부산/울산/경남	56	25.0	75.0
	강원	36	63.9	36.1
영농경력	20년 미만	95	31.6	68.4
	20년 이상	262	38.2	61.8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124	24.2	75.8
	2천만~3천만 원 미만	58	36.2	63.8
	3천만~4천만 원 미만	58	48.3	51.7
	4천만~5천만 원 미만	33	36.4	63.6
	5천만~7천만 원 미만	34	55.9	44.1
	7천만~1억 원 미만	23	34.8	65.2
	1억 원 이상	27	44.4	55.6
성별	남성	188	41.0	59.0
	여성	169	31.4	68.6
연령대	60세 미만	102	43.1	56.9
	60대	161	37.9	62.1
	70대 이상	94	26.6	73.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를 기준으로 보면, ‘마진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가 4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가 37.9%, ‘개별 농가가 아닌 지역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35.7% 순으로 높다<그림 1-47>.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는 지역마진 보장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

장 높고(47.3%), 채소 농가는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선택이 많았다(45.9%)<표1-12>. 지역별 가입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인 농가는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이 가입 거부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53.8%), 20년 이상의 농가는 보험료 부담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41.4%). 조수입에 관계없이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미치는 낮은 영향에 대한 선택률이 가장 높다. 60세 미만 및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마진 하락의 낮은 영향력을, 60대 응답자는 지역마진 보장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하였다.

〈표 1-12〉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마진(소득)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 마진 보장이 아닌 지역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27	43.2	37.9	35.7	2.2
세부 영농형태	과수	55	34.5	41.8	47.3	1.8
	채소	172	45.9	36.6	32.0	2.3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34	70.6	20.6	8.8	0.0
	충남/대전/세종	20	20.0	30.0	50.0	0.0
	충북	26	11.5	15.4	73.1	0.0
	전북	22	45.5	63.6	63.6	0.0
	전남/광주	26	38.5	38.5	23.1	0.0
	대구/경북	44	27.3	47.7	22.7	2.3
	부산/울산/경남	42	76.2	47.6	40.5	0.0
	강원	13	23.1	30.8	15.4	30.8
영농경력	20년 미만	65	53.8	29.2	46.2	0.0
	20년 이상	162	38.9	41.4	31.5	3.1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94	40.4	37.2	26.6	0.0
	2천만~3천만 원 미만	37	45.9	35.1	37.8	2.7
	3천만~4천만 원 미만	30	43.3	43.3	46.7	0.0
	4천만~5천만 원 미만	21	42.9	38.1	38.1	4.8
	5천만~7천만 원 미만	15	46.7	26.7	40.0	0.0
	7천만~1억 원 미만	15	40.0	40.0	53.3	13.3
	1억 원 이상	15	53.3	46.7	40.0	6.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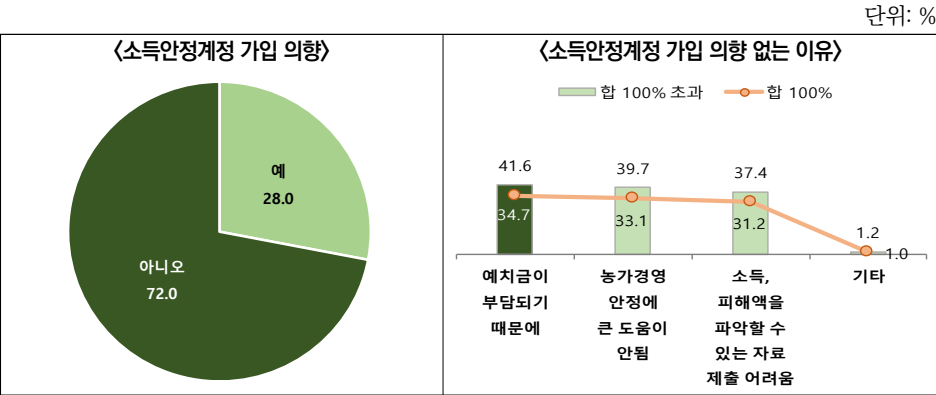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마진(소득)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 마진 보장이 아닌 지역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기타
성별	남성	111	36.9	42.3	36.9	3.6
	여성	116	49.1	33.6	34.5	0.9
연령대	60세 미만	58	46.6	37.9	36.2	0.0
	60대	100	38.0	34.0	42.0	3.0
	70대 이상	69	47.8	43.5	26.1	2.9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여부와 거부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예' 28.0%, '아니오' 72.0%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48>.

<그림 1-48>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357,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257(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는 40%, 채소 농가는 23.3%로 나타났다<표 1-13>.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52.9%, 강원도가 47.2%, 충남/대전/세종이 43.9%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인 응답자의 가입 의향 비율은 21.1%, 20년 이상은 30.5%로 나타났다. 조수입과 가입 의향 비율에는 특

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3〉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57	28.0	72.0
세부 영농형태	과수	100	40.0	60.0
	채소	257	23.3	76.7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6	8.7	91.3
	충남/대전/세종	41	43.9	56.1
	충북	31	9.7	90.3
	전북	34	29.4	70.6
	전남/광주	51	52.9	47.1
	대구/경북	62	32.3	67.7
	부산/울산/경남	56	1.8	98.2
	강원	36	47.2	52.8
영농경력	20년 미만	95	21.1	78.9
	20년 이상	262	30.5	69.5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124	25.8	74.2
	2천만~3천만 원 미만	58	31.0	69.0
	3천만~4천만 원 미만	58	27.6	72.4
	4천만~5천만 원 미만	33	27.3	72.7
	5천만~7천만 원 미만	34	38.2	61.8
	7천만~1억 원 미만	23	13.0	87.0
	1억 원 이상	27	33.3	66.7
성별	남성	188	31.9	68.1
	여성	169	23.7	76.3
연령대	60세 미만	102	37.3	62.7
	60대	161	31.1	68.9
	70대 이상	94	12.8	87.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예치금 부담’이 4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 안 됨’ 39.7%, ‘소득,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어려움’ 37.4% 순으로 높다<그림 1-48>.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는 자료 제출의 어려움에 대한 비율(46.7%)이 높았으며, 채소 농가는 예치금 부담과 농가경영

에 불필요하다는 이유가 41.1%로 가장 높다<표 1-14>. 지역별로는 특정한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경우 자료 제출의 어려움(46.7%)을, 20년 이상의 경우 예치금 부담(44.5%)을 가장 중요한 거부 이유로 제시하였다. 조수입과 가입 거부 이유와는 특정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응답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치금 부담을 가장 중요한 거부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1-14〉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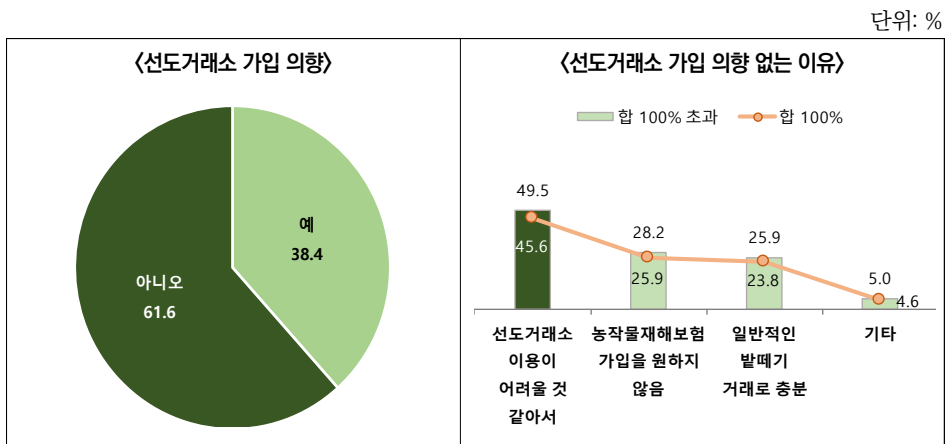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257	41.6	39.7	37.4	1.2
세부 영농형태	과수	60	43.3	35.0	46.7	0.0
	채소	197	41.1	41.1	34.5	1.5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2	61.9	40.5	4.8	0.0
	충남/대전/세종	23	8.7	26.1	65.2	0.0
	충북	28	25.0	7.1	67.9	0.0
	전북	24	45.8	54.2	54.2	0.0
	전남/광주	24	29.2	41.7	29.2	0.0
	대구/경북	42	35.7	23.8	42.9	0.0
	부산/울산/경남	55	52.7	70.9	38.2	0.0
	강원	19	52.6	26.3	5.3	15.8
영농경력	20년 미만	75	34.7	44.0	46.7	0.0
	20년 이상	182	44.5	37.9	33.5	1.6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92	42.4	30.4	35.9	1.1
	2천만~3천만 원 미만	40	32.5	50.0	35.0	2.5
	3천만~4천만 원 미만	42	52.4	31.0	42.9	0.0
	4천만~5천만 원 미만	24	33.3	45.8	54.2	0.0
	5천만~7천만 원 미만	21	33.3	57.1	33.3	0.0
	7천만~1억 원 미만	20	55.0	25.0	40.0	5.0
	1억 원 이상	18	38.9	72.2	16.7	0.0
성별	남성	128	46.9	37.5	33.6	2.3
	여성	129	36.4	41.9	41.1	0.0
연령대	60세 미만	64	32.8	45.3	39.1	0.0
	60대	111	43.2	38.7	36.9	1.8
	70대 이상	82	46.3	36.6	36.6	1.2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선도거래소를 이용하여 선도거래(발떼기 거래)를 할 의향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예’가 38.4%, ‘아니오’가 61.6%의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1-49>. 가입 의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 농가의 경우 가입 의향 비율이 41%, 채소 농가는 37.4%다<표 1-15>. 지역별로는 충북이 64.5%, 전남/광주가 58.8%, 강원도가 55.6%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과 가입 의향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 또한 조수입과도 큰 관련이 없었다. 응답자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가입 의향 비율이 43.1%, 60대는 41%, 70대 이상은 28.7%로,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다.

〈그림 1-49〉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은 N=357,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220(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1-15〉 선도거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357	38.4	61.6
세부 영농형태	과수	100	41.0	59.0
	채소	257	37.4	62.6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6	8.7	91.3
	충남/대전/세종	41	41.5	58.5
	충북	31	64.5	35.5
	전북	34	32.4	67.6
	전남/광주	51	58.8	41.2
	대구/경북	62	25.8	74.2
	부산/울산/경남	56	33.9	66.1
	강원	36	55.6	44.4
영농경력	20년 미만	95	37.9	62.1
	20년 이상	262	38.5	61.5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124	29.8	70.2
	2천만~3천만 원 미만	58	31.0	69.0
	3천만~4천만 원 미만	58	48.3	51.7
	4천만~5천만 원 미만	33	36.4	63.6
	5천만~7천만 원 미만	34	55.9	44.1
	7천만~1억 원 미만	23	34.8	65.2
	1억 원 이상	27	55.6	44.4
성별	남성	188	37.2	62.8
	여성	169	39.6	60.4
연령대	60세 미만	102	43.1	56.9
	60대	161	41.0	59.0
	70대 이상	94	28.7	71.3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선도거래소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4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음’ 28.2%, ‘일반적인 밭떼기 거래로 충분’ 25.9% 순으로 높다<그림 1-49>.

선도거래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수와 채소 농가 모두 거래소 이용 방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52.5%, 48.4%)〈표 1-16〉.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인천, 충북, 전남/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모두 선도거래소 이용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이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거래소 이용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났다. 조수입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거래소 이용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거부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1-16〉 선도거래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표준매매 계약서 작성 등 선도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발매기 거래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220	49.5	28.2	25.9	5.0
세부 영농형태	과수	59	52.5	23.7	27.1	1.7
	채소	161	48.4	29.8	25.5	6.2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42	81.0	7.1	16.7	0.0
	충남/대전/세종	24	37.5	41.7	20.8	0.0
	충북	11	54.5	27.3	18.2	0.0
	전북	23	47.8	56.5	43.5	0.0
	전남/광주	21	47.6	23.8	28.6	0.0
	대구/경북	46	43.5	28.3	28.3	0.0
	부산/울산/경남	37	48.6	37.8	29.7	0.0
	강원	16	6.3	6.3	18.8	68.8
영농경력	20년 미만	59	49.2	23.7	33.9	3.4
	20년 이상	161	49.7	29.8	23.0	5.6
2021년 조수입	2천만 원 미만	87	56.3	27.6	18.4	4.6
	2천만~3천만 원 미만	40	40.0	30.0	37.5	5.0
	3천만~4천만 원 미만	30	43.3	30.0	30.0	10.0
	4천만~5천만 원 미만	21	42.9	19.0	33.3	4.8
	5천만~7천만 원 미만	15	46.7	33.3	26.7	0.0
	7천만~1억 원 미만	15	60.0	33.3	13.3	0.0
	1억 원 이상	12	50.0	25.0	33.3	8.3
성별	남성	118	47.5	28.8	27.1	6.8
	여성	102	52.0	27.5	24.5	2.9
연령대	60세 미만	58	44.8	24.1	36.2	1.7
	60대	95	50.5	29.5	26.3	5.3
	70대 이상	67	52.2	29.9	16.4	7.5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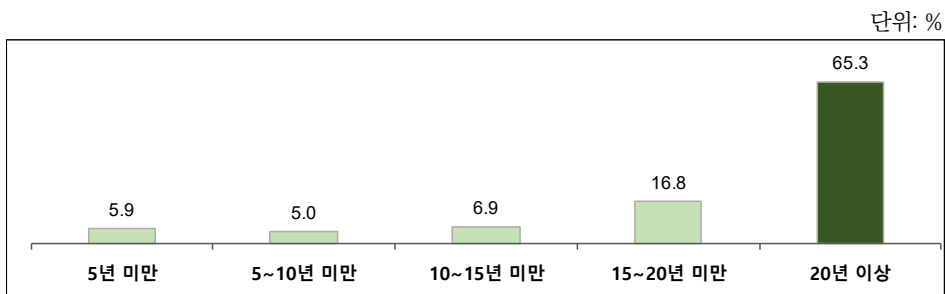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 축산 조사 결과

4.1. 축산경력

축산경력은 ‘20년 이상’이 65.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5~20년 미만’ 16.8%, ‘10~15년 미만’ 6.9% 순으로 높다<그림 1-50>.

〈그림 1-50〉 축산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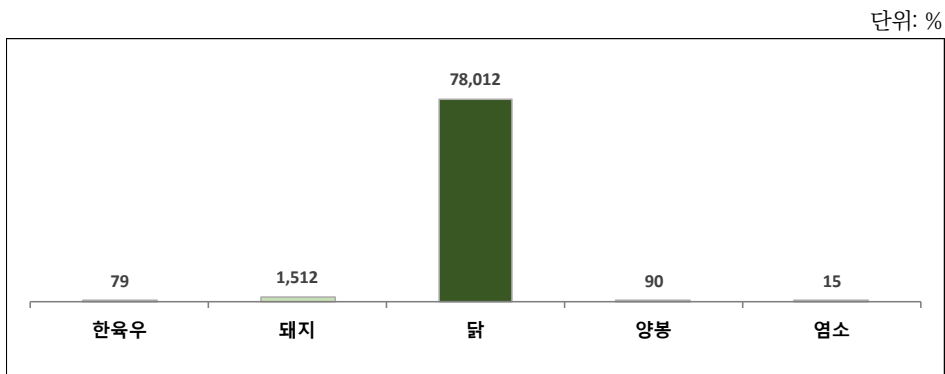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목별 사육두수의 평균은 ‘닭’이 7만 8,012수, ‘돼지’ 1,512두, ‘양봉’ 90군, ‘한육우’ 79두, ‘염소’ 15두 순으로 높다<그림 1-51>.

〈그림 1-51〉 축종별 사육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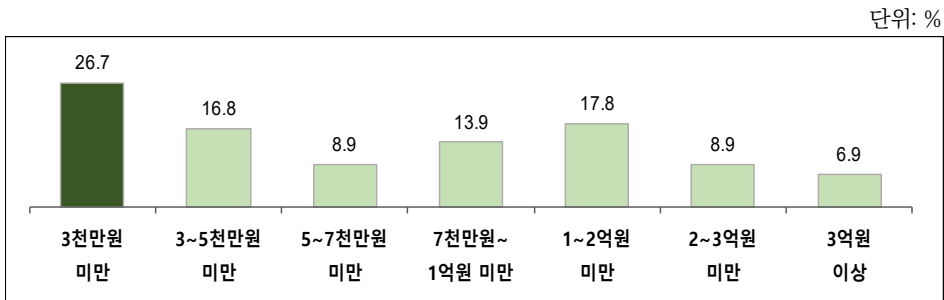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조수입은 ‘3천만 원 미만’이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억~2억 원 미만’이 17.8%, ‘3천만~5천만 원’ 16.8% 순으로 높다<그림 1-52>.

〈그림 1-52〉 조수입



주: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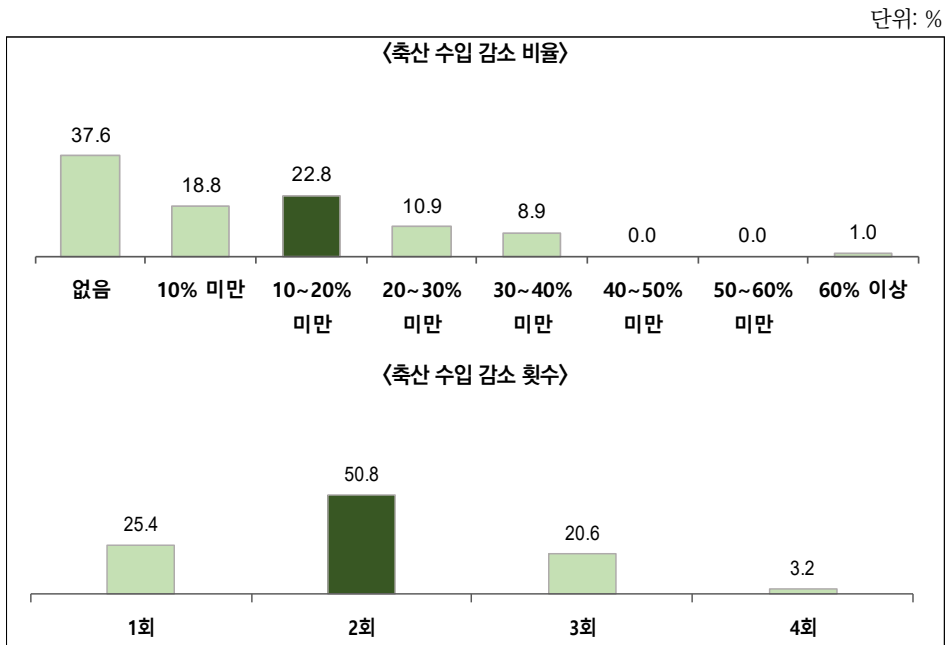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2. 축산경영 관련 위험 요인

최근 5년간 축산 수입이 정상적인 수준(5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험 및 횟수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없음’이 3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2.8%, ‘10% 미만’ 18.8%, ‘20~30% 미만’ 10.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3>. 축산 수입이 감소한 횟수를 보면, ‘2회’가 5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25.4%, ‘3회’ 20.6%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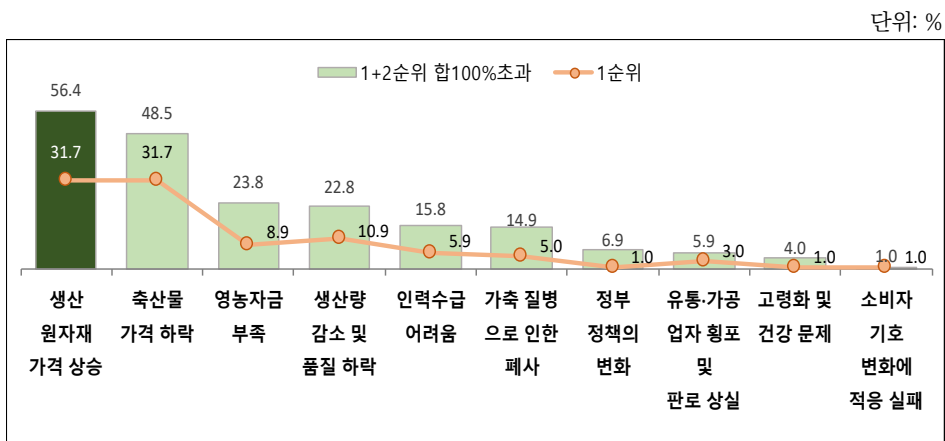
축산 농가 수입이 감소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설문의 응답에 대해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이 5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축산물 가격 하락’ 48.5%, ‘농가 부채 상환 및 영농자금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 부족’ 23.8%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4>.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축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각각 3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10.9%, ‘농가 부채 상환 및 영농자금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 부족’ 8.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4>.

〈그림 1-53〉 축산 수입 감소 비율 및 횟수



주: '축산 수입 감소 비율'은 N=101, '축산 수입 감소 횟수'는 n=63(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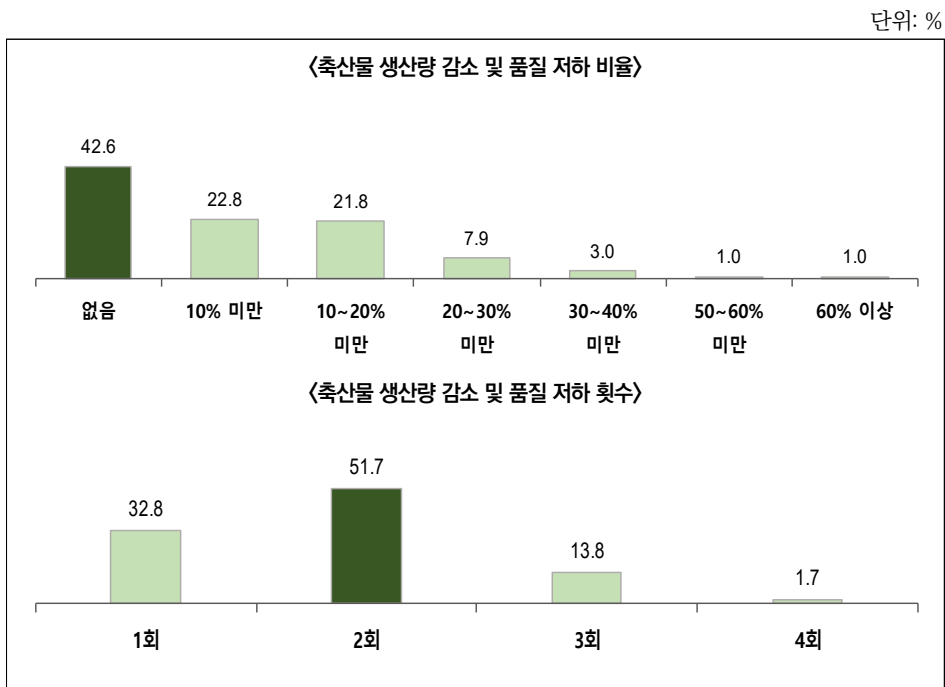
〈그림 1-54〉 축산 수입 감소의 주된 이유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생산된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10% 미만’이 2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1.8%, ‘20~30% 미만’ 7.9% 순으로 높다. ‘없음’은 42.6%를 차지한다<그림 1-55>.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를 보면, ‘2회’가 5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회’ 32.8%, ‘3회’ 13.8% 순으로 높다<그림 1-55>.

〈그림 1-55〉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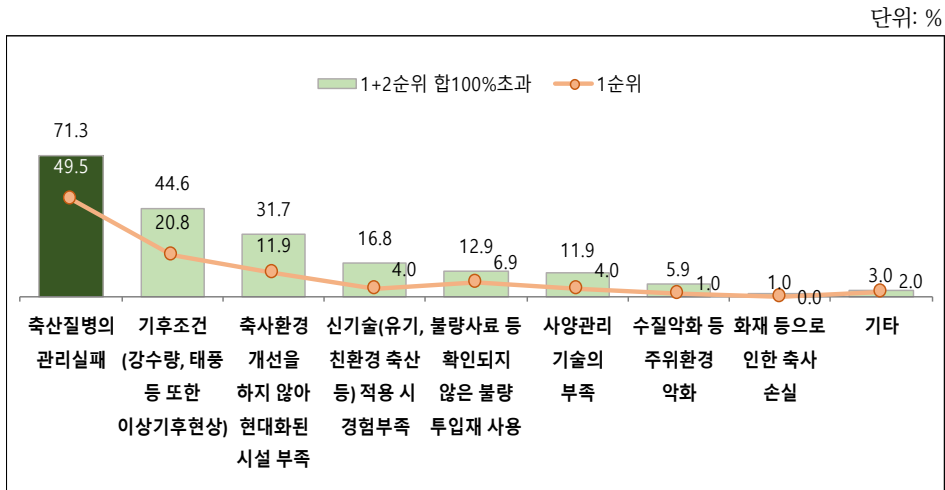
주: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비율’은 N=101,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횟수’는 n=58(감소 경험 있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에 대한 응답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축산 질병의 관리 실패’가 7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후조건’이 44.6%, ‘축사환경 개선을 하지 않아 현대화된 시설 부족’이 31.7%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6>. 1순위 기준으로 보면, ‘축산 질병 관리 실패’가 49.5%로 가

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후조건’ 20.8%, ‘축사환경 개선을 하지 않아 현대화된 시설 부족’ 11.9%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6>.

〈그림 1-56〉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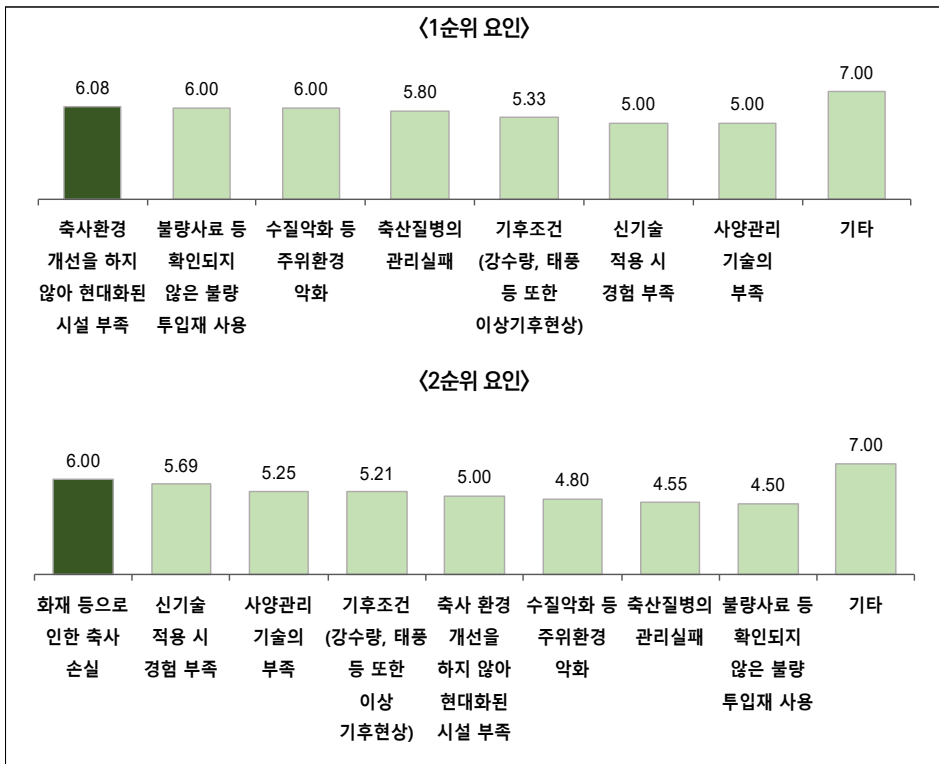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을 묻는 설문(7점 만점)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 요인으로는, ‘축사환경 개선을 하지 않아 현대화된 시설 부족’이 6.0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불량사료 등 확인되지 않은 불량 투입재 사용’, ‘수질 악화 등 주위 환경 악화’가 각각 6.0점, ‘축산 질병의 관리 실패’ 5.80점 순으로 높다<그림 1-57>. 2순위 요인으로는, ‘화재 등으로 인한 축사 손실’ 6.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신기술 적용 시 경험 부족’ 5.69점, ‘사양관리 기술의 부족’ 5.25점 순으로 높다<그림 1-57>.

〈그림 1-57〉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요인의 영향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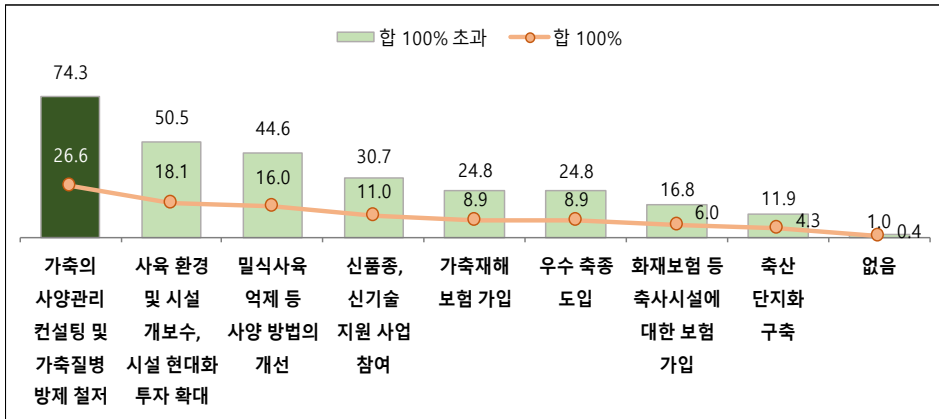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영농 활동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가축의 사양관리 컨설팅 및 가축 질병 방제 철저’가 7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육환경 및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투자 확대’ 50.5%, ‘밀식사육 억제 등 사양 방법의 개선’ 44.6%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8>. 합 100% 기준으로 보면, ‘가축의 사양관리 컨설팅 및 가축 질병 방제 철저’가 2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육환경 및 시설 개보수, 시설 현대화 투자 확대’ 18.1%, ‘밀식사육 억제 등 사양 방법의 개선’ 16.0% 순으로 높다<그림 1-58>.

〈그림 1-58〉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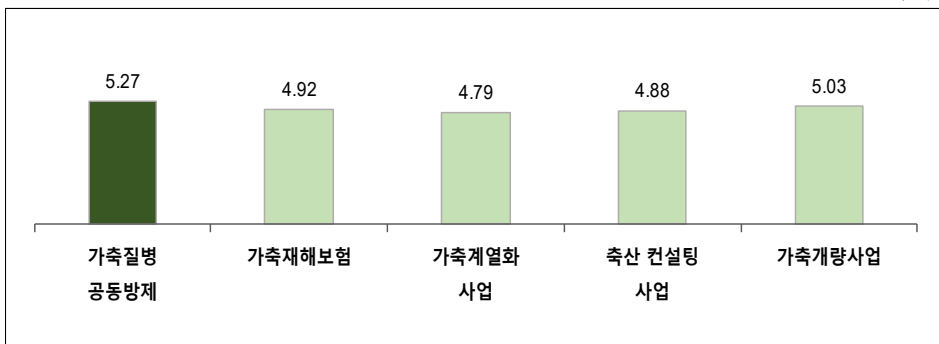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7점 만점)에 대한 응답 점수는 ‘가축질병 공동방제’가 5.27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축개량사업’ 5.03점, ‘가축재해보험’ 4.92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59>.

〈그림 1-59〉 축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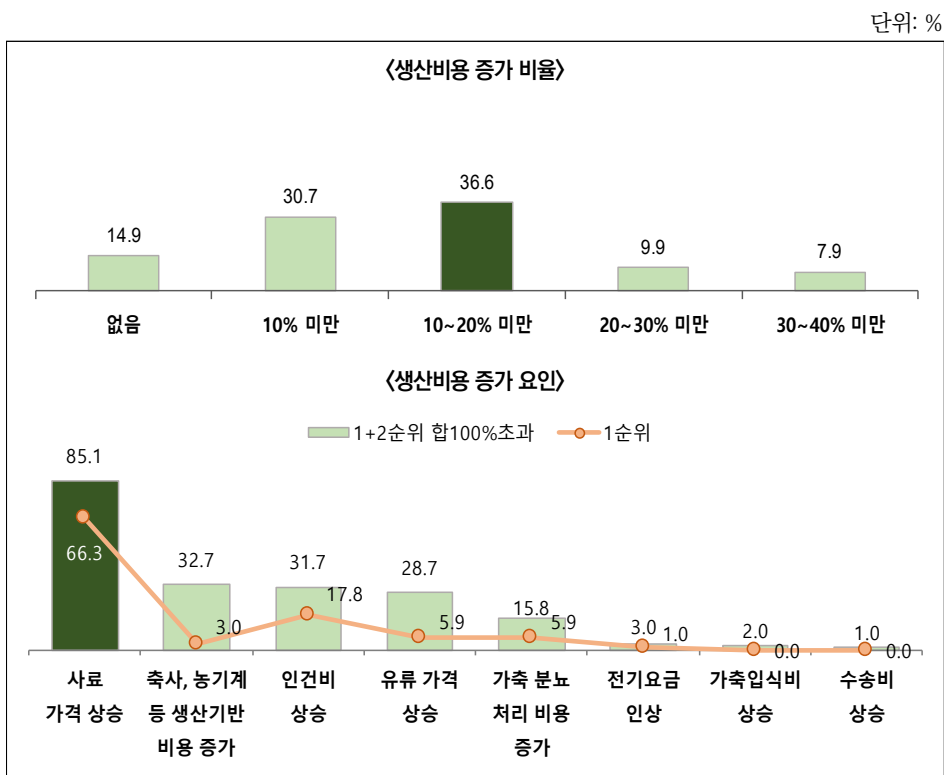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간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와 생산비용 증가 최고 비율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10~20% 미만’이 3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 미만’ 30.7%, ‘20~30% 미만’ 9.9% 순으로 높다<그림 1-60>. 생산비용 증가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사료 가격 상승’이 85.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축산 농기계 등 생산기반 비용 증가’ 32.7%, ‘인건비 상승’ 31.7% 순으로 높다<그림 1-60>.

〈그림 1-60〉 생산비용 증가 비율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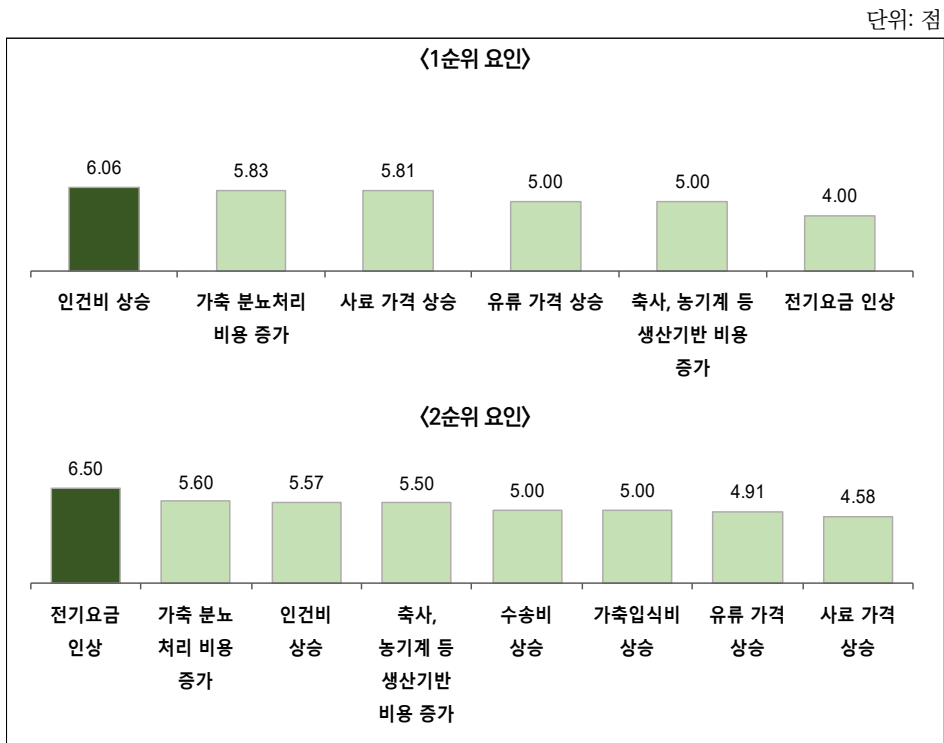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의 증가 요인과 영향력을 요인별로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하였다. 1순위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 6.0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가축 분뇨 처리 비용 증가’ 5.83점, ‘사료 가격 상승’ 5.81점 등의 순으로 높다<그림 1-61>. 2순위 요인은 ‘전기요금 인상’이 6.5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가축 분뇨 처리 비용 증가’ 5.60점, ‘인건비 상승’ 5.57점 순으로 높다<그림 1-61>.

〈그림 1-61〉 생산비용 증가 요인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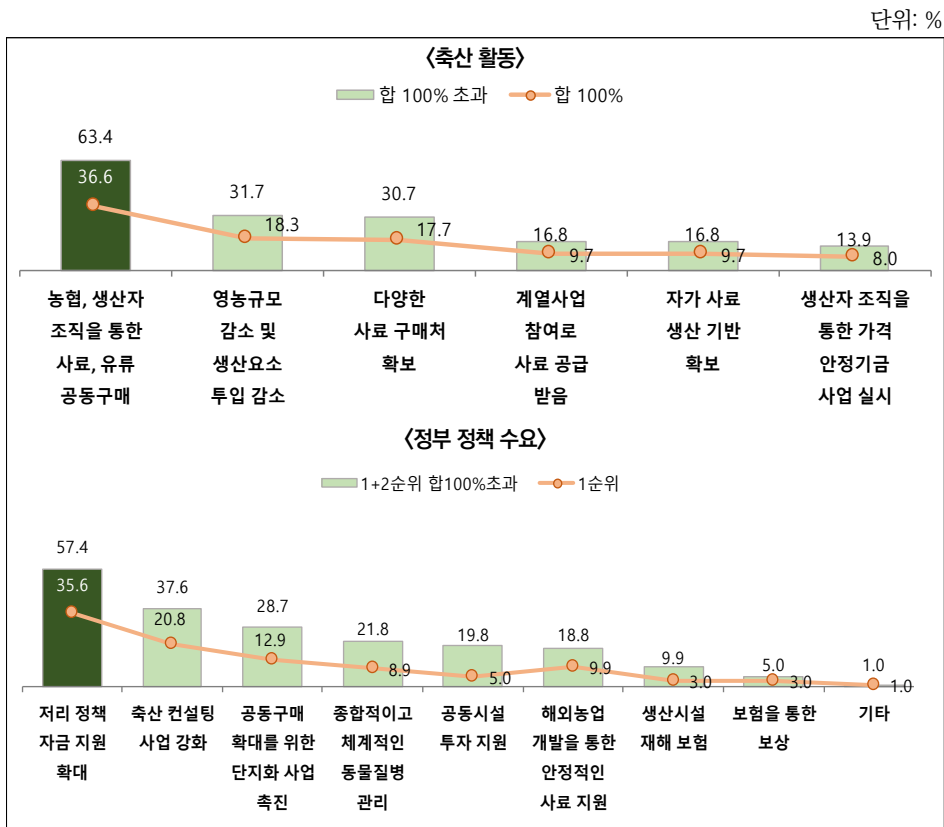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응답자가 수행한 축산 활동의 종류와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수요에 대해 설문하였다.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농협, 생산자 조직 등을 통한 사료, 유류 공동구매’가 6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영농규모 감소 및 생산요소 투입 감소시킴’ 31.7%, ‘다양한 사료구매처 확보’ 30.7% 순으로 높다<그림 1-62>.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수요를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산 컨설팅 사업 강화’ 37.6%, ‘공동구매 확대를 위한 단지화 사업 촉진’ 28.7% 순으로 높다<그림 1-62>.

〈그림 1-62〉 생산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정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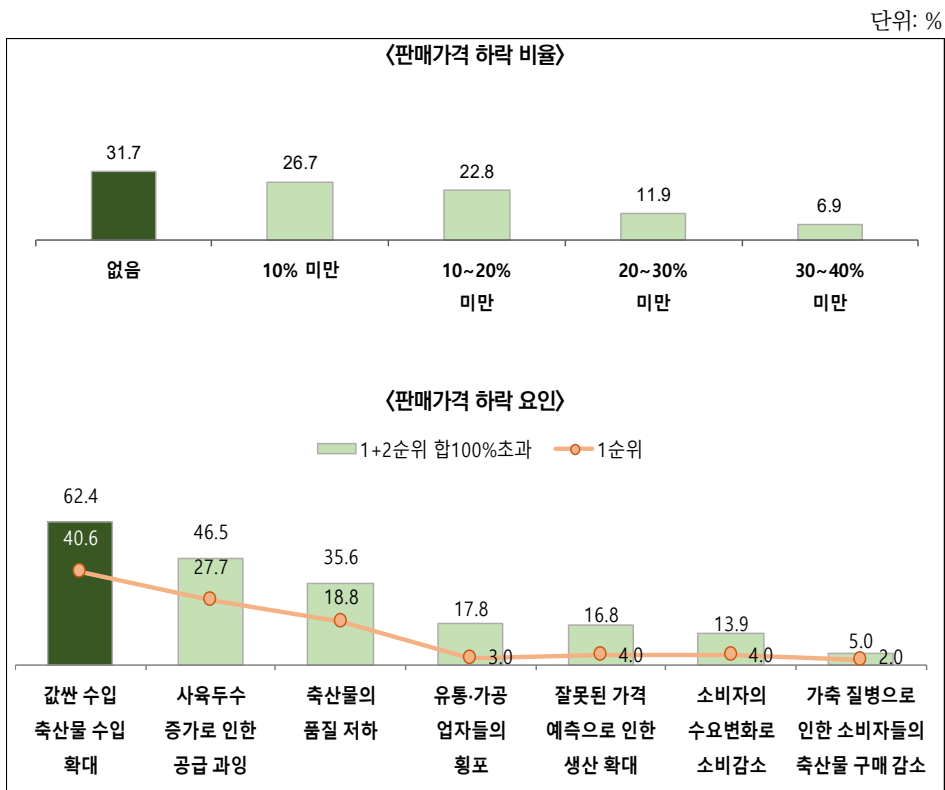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최근 5년 동안 축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대 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경험과 위험 요인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10% 미만’이 26.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20% 미만’ 22.8%, ‘20~30% 미만’ 11.9% 순으로 높다. ‘없음’ 응답의 경우 31.7%를 차지한다<그림 1-63>. 판매가격 하락 요인을 1+2순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값싼 수입 축산물 수입 확대’가 6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46.5%, ‘축산물의 품질 저하’ 35.6% 순으로 높다<그림 1-63>.

〈그림 1-63〉 판매가격 하락 비율 및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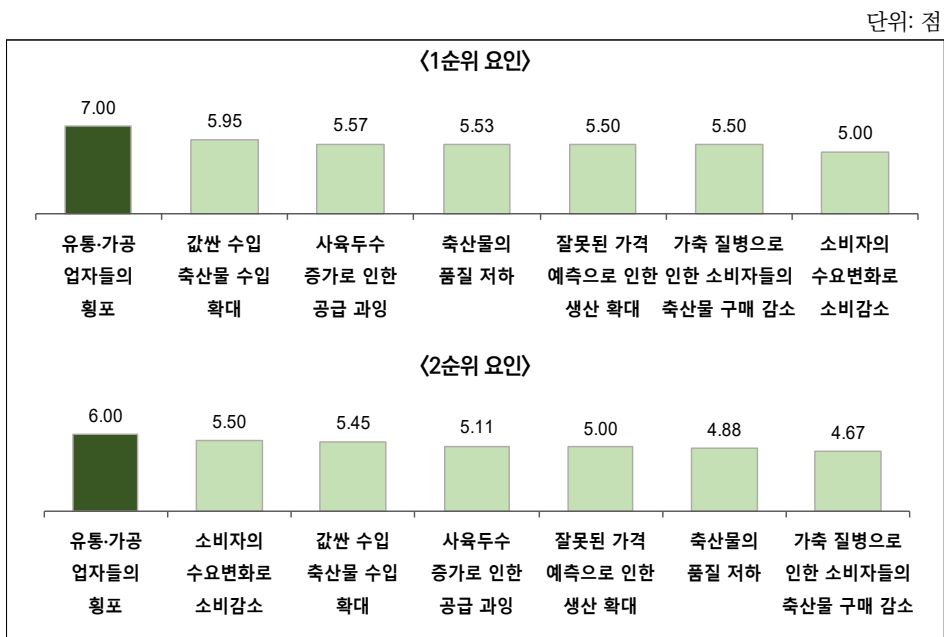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 주요인의 영향력(7점 만점 리커트 척도)의 1순위 요인은 ‘유통·가공업자(중간상인, 대형마트, 가공기업)들의 횡포’가 7.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값싼 수입 축산물 수입 확대’ 5.95점,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5.57점 순으로 높다<그림 1-64>. 2순위 요인은 ‘유통·가공업자(중간상인, 대형마트, 가공기업)들의 횡포’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변화로 소비 감소’ 5.50점, ‘값싼 수입 축산물 수입 확대’ 5.45점 순으로 높다<그림 1-64>.

〈그림 1-64〉 가격 하락 요인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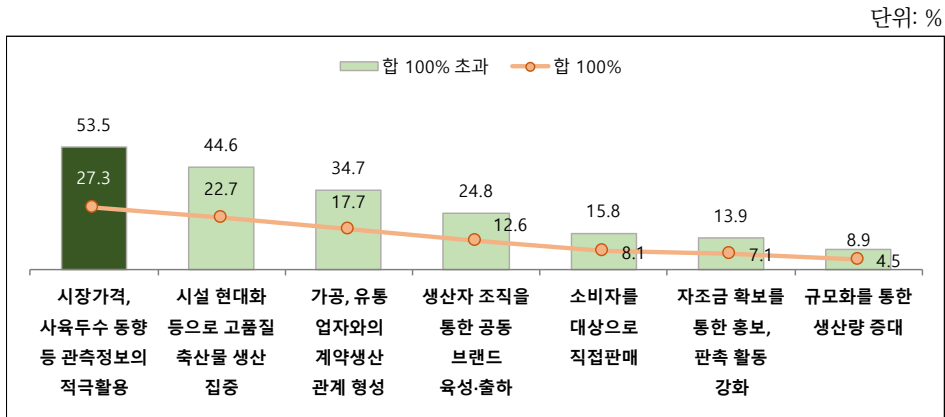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 활동 유형에 대한 설문 응답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시장가격, 사육두수 동향 등 관측정보의 적극 활용’이 5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집중’ 44.6%, ‘가공, 유통업자와의 계약 생산 관계 형성’ 34.7% 순으로 높다<그림 1-65>. 합 100% 기준으로 보면, ‘시장가격, 사육두수 동향 등 관측정보의 적극 활용’이

2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집중’ 22.7%, ‘가공, 유통업자와의 계약 생산 관계 형성’ 17.7% 순으로 높다<그림 1-65>.

〈그림 1-65〉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축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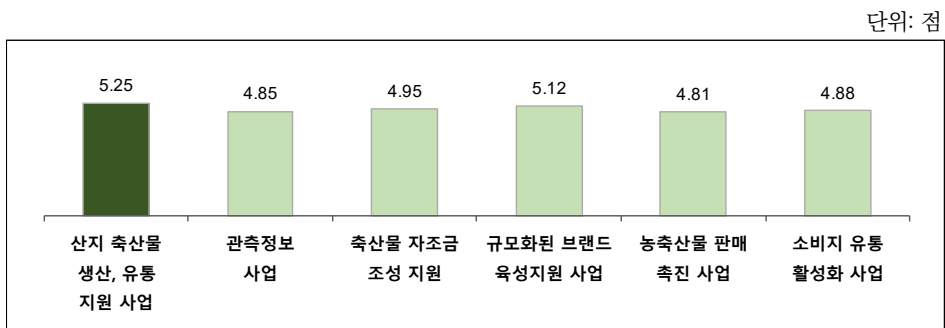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7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 요인은 ‘산지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 5.2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5.12점, ‘축산물 자조금 조성 지원’ 4.95점 순으로 높다<그림 1-66>.

〈그림 1-66〉 가격 하락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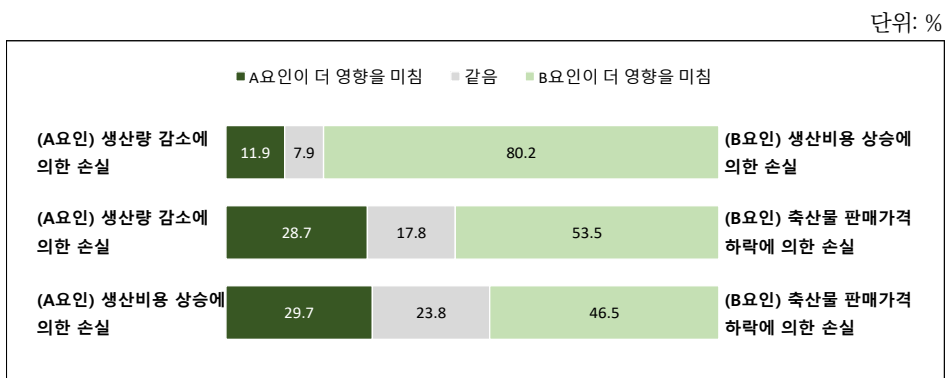


주: N=10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양한 요인이 축산경영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 여러 요인 중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의 영향력의 대소를 비교하는 설문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위험 요인의 잠재적 손실 크기를 비교하였다<그림 1-67>.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이 80.2%로 더 높다<그림 1-67>. ‘생산량 감소에 의한 손실’과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53.5%로 더 높다<그림 1-67>. ‘생산비용 상승에 의한 손실’과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 중에서는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의한 손실’이 46.5%로 더 높다<그림 1-67>.

〈그림 1-67〉 축산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비교



주: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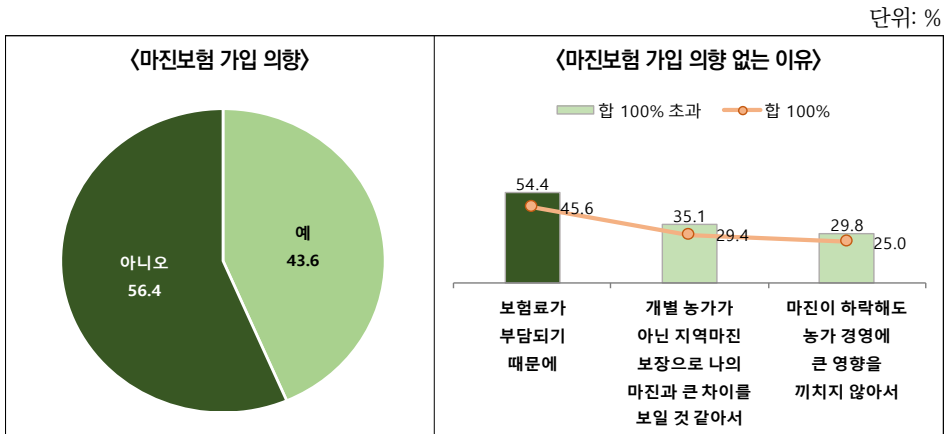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4.3. 축산경영 관련 보험 수요

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축산 농가의 마진(축산물 가격-사료비) 감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진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고보조 수준(50%)의 자기 부담금을 납부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

에 응답자들은 ‘예’ 43.6%, ‘아니오’ 56.4%의 비율로 응답하였다<그림 1-68>.

〈그림 1-68〉 마진보험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N=101, '마진보험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57(가입 의향 없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돈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은 50%, 기타 농가는 42%, 한육우 농가는 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17>. 지역별 가입 의향 비율은 충남/대전/세종이 85.7%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70%, 부산/울산/경남이 53.8%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 20년 이상인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이 47%로, 20년 미만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37.1%)보다 높다. 조수입 2억 원 이상인 농가의 가입 의향 비율이 81.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천만~1억 원 미만의 농가가 56.5%, 1억~2억 원 미만의 농가가 38.9%, 5천만 원 미만의 농가가 25% 순으로 높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다.

〈표 1-17〉 마진보험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1	43.6	56.4
사육 축종	한육우	81	42.0	58.0
	양돈	14	50.0	50.0
	기타	7	42.9	57.1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4	21.4	78.6
	충남/대전/세종	14	85.7	14.3
	충북	10	30.0	70.0
	전북	11	36.4	63.6
	전남/광주	13	15.4	84.6
	대구/경북	16	37.5	62.5
	부산/울산/경남	13	53.8	46.2
	강원	10	70.0	30.0
영농경력	20년 미만	35	37.1	62.9
	20년 이상	66	47.0	53.0
2021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44	25.0	75.0
	5천만~1억 원 미만	23	56.5	43.5
	1억~2억 원 미만	18	38.9	61.1
	2억 원 이상	16	81.3	18.8
성별	남성	89	44.9	55.1
	여성	12	33.3	66.7
연령대	60세 미만	35	57.1	42.9
	60대	42	38.1	61.9
	70대 이상	24	33.3	66.7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가 5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개별 농가 마진 보장이 아닌 사육규모 기준 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35.1%, ‘마진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29.8% 순으로 높다<그림 1-68>.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는 보험료 부담(57.4%)이, 양돈 농가는 사육규모 기준 마진 설정(42.9%)과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력(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1-18>.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조수입이 5천만~1억 원 미만인 농가

를 제외하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이 모두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60세 미만의 응답자는 보험료 부담(66.7%)을, 60대 응답자는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미치는 미미한 영향(38.5%)과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38.5)를,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보험료 부담(68.8%)을 가장 중요한 거부 이유로 제시하였다.

〈표 1-18〉 마진보험 가입 거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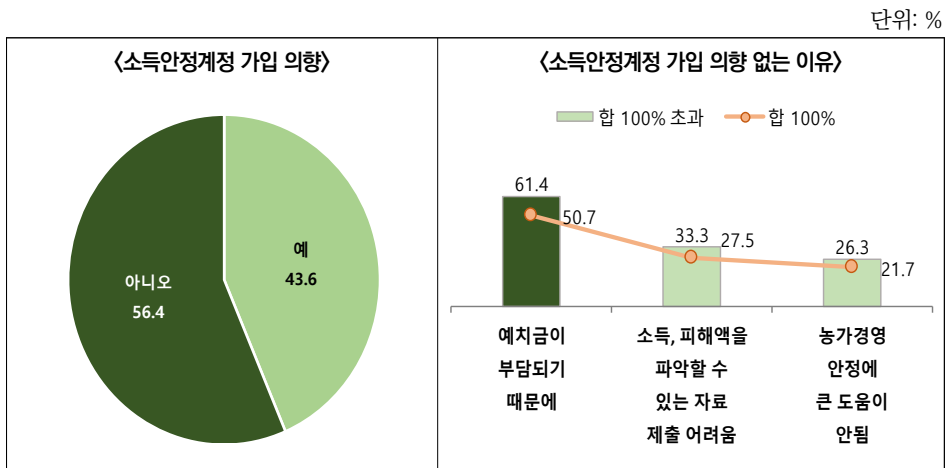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 마진 보장이 아닌 사육규모 기준 마진 보장으로 나의 마진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아서	마진(축산물 가격-사료비)이 하락해도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전체]		57	54.4	35.1	29.8
사육 축종	한육우	47	57.4	36.2	27.7
	양돈	7	28.6	42.9	42.9
	기타	4	75.0	0.0	25.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1	36.4	18.2	45.5
	충남/대전/세종	2	50.0	0.0	50.0
	충북	7	0.0	71.4	28.6
	전북	7	100.0	42.9	28.6
	전남/광주	11	27.3	54.5	18.2
	대구/경북	10	90.0	10.0	0.0
	부산/울산/경남	6	100.0	50.0	50.0
	강원	3	33.3	0.0	66.7
영농 경력	20년 미만	22	59.1	40.9	31.8
	20년 이상	35	51.4	31.4	28.6
2021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33	54.5	30.3	24.2
	5천만~1억 원 미만	10	40.0	50.0	30.0
	1억~2억 원 미만	11	63.6	45.5	45.5
	2억 원 이상	3	66.7	0.0	33.3
성별	남성	49	59.2	34.7	28.6
	여성	8	25.0	37.5	37.5
연령대	60세 미만	15	66.7	40.0	40.0
	60대	26	38.5	34.6	38.5
	70대 이상	16	68.8	31.3	6.3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과 거부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은 ‘예’ 43.6%, ‘아니오’ 56.4%였다<그림 1-69>.

〈그림 1-69〉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및 거부 이유



주: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N=101,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없는 이유'는 n=57(가입 의향 없는 응답자)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가입 의향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는 가입 의향 비율이 40.7%, 기타 농가는 57.1%, 양돈 농가는 50%로 나타났다<표 1-19>. 지역별로는 충남/대전/세종의 경우 가입 의향 비율이 92.9%, 강원도의 경우 70%, 충북의 경우 40% 등의 순으로 높다. 영농경력 20년 미만의 응답자의 가입 의향 비율은 40%, 20년 이상의 경우 45.5%로 나타났다. 조수입이 2억 원 이상인 응답자의 가입 의향 비율이 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5천만~1억 원 미만이 56.5%, 1억~2억 원 미만이 33.3% 등의 순으로 높다.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 비율이 높다.

〈표 1-19〉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101	43.6	56.4
사육 축종	한육우	81	40.7	59.3
	양돈	14	50.0	50.0
	기타	7	57.1	42.9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4	7.1	92.9
	충남/대전/세종	14	92.9	7.1
	충북	10	40.0	60.0
	전북	11	36.4	63.6
	전남/광주	13	30.8	69.2
	대구/경북	16	37.5	62.5
	부산/울산/경남	13	38.5	61.5
	강원	10	70.0	30.0
영농경력	20년 미만	35	40.0	60.0
	20년 이상	66	45.5	54.5
2021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44	29.5	70.5
	5천만~1억 원 미만	23	56.5	43.5
	1억~2억 원 미만	18	33.3	66.7
	2억 원 이상	16	75.0	25.0
성별	남성	89	46.1	53.9
	여성	12	25.0	75.0
연령대	60세 미만	35	51.4	48.6
	60대	42	47.6	52.4
	70대 이상	24	25.0	75.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를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보면, ‘예치금이 부담 되기 때문에’가 61.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33.3%,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6.3% 순으로 높다<그림 1-69>.

거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육우 농가는 예치금 부담 (64.6%)을, 양돈 농가는 농가경영에 미미한 도움(42.9%)을, 기타 농가는 예치금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높았다<표 1-20>. 영농경력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예치금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다. 조수입이 5천만~1억 원 미만인 농가를 제외하고 예치금 부담을 이유로 한 거부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20〉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예치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피해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소득안정계정이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전체]		57	61.4	33.3	26.3
사육 축종	한육우	48	64.6	35.4	25.0
	양돈	7	28.6	28.6	42.9
	기타	3	100.0	0.0	0.0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	13	76.9	7.7	15.4
	충남/대전/세종	1	100.0	0.0	0.0
	충북	6	16.7	83.3	0.0
	전북	7	85.7	57.1	28.6
	전남/광주	9	33.3	44.4	22.2
	대구/경북	10	50.0	20.0	30.0
	부산/울산/경남	8	75.0	37.5	75.0
	강원	3	100.0	0.0	0.0
영농경력	20년 미만	21	57.1	38.1	23.8
	20년 이상	36	63.9	30.6	27.8
2021년 조수입	5천만 원 미만	31	58.1	22.6	29.0
	5천만~1억 원 미만	10	40.0	60.0	20.0
	1억~2억 원 미만	12	75.0	50.0	25.0
	2억 원 이상	4	100.0	0.0	25.0
성별	남성	48	60.4	37.5	27.1
	여성	9	66.7	11.1	22.2
연령대	60세 미만	17	82.4	35.3	17.6
	60대	22	45.5	36.4	27.3
	70대 이상	18	61.1	27.8	33.3

주: 중복응답 허용, 합 100% 초과 기준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5. 시사점

5.1.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한 경영 위험 발생 요인

농업 경영 위험 요인을 농가 수입 감소,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판매 가격 하락,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위험 요인에 대한 농가의 대응 방식, 선호하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농업 유형(논/벼, 과채, 축산)에 따라 경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1-21>. 또한 경영 위험 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도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21〉 농가 수입 감소 주요인 및 세부 요인(요약)

구분		세부 요인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주요인	판매가격 하락	공급 과잉	저가 수입 농산물 유통	저가 수입 축산물 공급 확대
		유통업자 횡포	재배환경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	공급 과잉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	축산물 품질 저하
	생산비용 상승 (원자재 등)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축사, 농기계 등 생산요소 비용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및 유류 가격 상승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병충해	병충해	축산 질병 관리 실패
		기후조건	기후조건	기후조건 낙후된 축사환경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논/벼 농가의 경우, 농가 수입 감소에 미치는 주요인은 ①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② 생산 원자재 가격 상승, ③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이다. 판매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공급 과잉과 유통업자 횡포이며, 생산비용 상승의 주원인은 주로 비료

및 농약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고,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의 주원인은 병충해와 기후조건이다.

과채 농가의 경우, 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①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② 생산비용 상승, ③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이다. 판매가격 하락의 주원인은 저가 수입 농산물 유통, 재배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 풍작으로 인한 공급 과잉을 들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의 주원인은 인건비 상승, 비료 및 농약 가격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의 주원인은 기후조건, 병충해라고 볼 수 있다.

축산 농가의 경우, 수입 감소 주요인은 ① 생산비용 상승, ② 판매가격 하락, ③ 영농자금 부족, ④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을 들 수 있다. 생산비용 상승의 주요인은 사료 가격 상승, 축사, 농기계 등 생산요소 비용 증가, 인건비 및 유류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판매가격 하락의 주요인은 저가 수입 축산물 수입 확대, 공급 과잉, 축산물의 품질 저하이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의 주요인은 축산 질병에 대한 관리 실패, 기후조건, 낙후된 축사환경이다.

5.2. 농업 유형별로 상이한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

농업 경영 위험 주요인과 세부 요인은 농업 유형별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위험 대처방식과 선호하거나 만족하는 정부 정책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표 1-22>.

논/벼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주로 교육/컨설팅 및 병충해 종합관리(IPM)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 확대 및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며, 시설 현대화, 신품종 및 신기술 지원사업,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 생산비용 증가에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재 일괄구매, 영농 규모 축소를 통해 주로 대응하며, 투입재 보조금 지원, 농가 구입 시 저리 정책자금 지원, 생산시설 지원 등의 정부 정책 확대를 요구한다. 가격 하락의 위험에는 품종

다양화, 소비자 직접 판매 등으로 대응하며, 계약재배사업 및 수급 안정화 사업,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관측정보 활용 등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과채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시설 확대 및 개보수, 병충해 관리 및 교육컨설팅에 주로 참여한다. 신품종, 신기술 지원사업,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생산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 영농자재 일괄구매, 영농규모 축소, 장기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투입재 보조, 저리 정책자금 지원, 생산시설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판매가격 하락의 어려움에 소비자 직접 판매, 출하 시기 조절, 계약재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자조금 조성 지원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특히 계약재배보다는 소비자직거래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계약 거래가 파기되어 손실을 경험한 비율은 매우 적지만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경매를 이용하고 일정 생산량만 계약하며, 생산자 단체 위주로 계약한다.

〈표 1-22〉 경영 위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요약)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판매가격 하락	교육 컨설팅 참여	시설 현대화	소비자 직접 판매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참여	관측정보 활용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병충해 종합관리 (IPM) 참여	신품종 및 신기술 지원사업	출하 시기 조절	자조금 조성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관측정보 사업
	시설 확대 및 개보수 작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	계약재배		계약 생산	
생산비용 상승 (원자재 등)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재 일괄구매	투입재 보조금 지원	영농자재 일괄구매	투입재 보조	자재 공동구매	저리 정책자금 지원
		농가 구입 시 저리 정책자금	영농규모 축소	저리 정책자 금 지원	축산 규모 감소	
	영농규모 축소	생산시설 지원	장기계약	생산시설 지원	다양한 구매처 확보	경영 컨설팅

(계속)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대처방식	정책 선호
생산량 감소 및 품질 하락	품종 다양화	계약재배화 사업	시설 확대 및 개보수	신품종 및 신기술 지원사업	가축 사양관리 컨설팅	질병 방제
		수급 안정화 사업			철저한 가축 질병 방제	재해보험
	소비자 직접 판매	규모화된 브랜드 육성 사업 참여	병충해 관리 및 교육 컨설팅 참여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현대화	계열화 사업
		관측정보 활용				
계약 파기 위험	-		소비자 직거래 도매시장 경매 이용 및 일정 생산량만 계약 생산자 단체 위주의 계약	-	-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축산 농가의 경우,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에 대해 가축 사양관리 컨설팅 및 철저한 가축 질병 방제, 시설 현대화 등으로 대응한다. 질병 방제, 재해보험, 계열화 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 생산비용 상승 위험은 자재 공동구매, 축산 규모 감소, 다양한 구매처 확보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며, 저리 정책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 가격 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계약 생산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산지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 관측정보 사업 등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한다.

따라서 경영 위험 감소를 위한 농가의 대처방식과 정책 선호도를 인식하고, 이 질적인 정책 개선 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3. 농가 유형에 따라 다른 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 상품 수용성

농업 유형별로 재해보험 가입률 및 보험 상품 선호도가 다르지만, 보험 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체로 비슷하다. 논벼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46.4%로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표 1-23>.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32.5%이며, 가입 거부의 주된 이유는 ‘보험료 부담’이다.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28.5%이며, 가입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예치금 부담’이다.

과채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39.8%로 상대적으로 논벼 농가보다 낮다.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36.4%이며, 가입 거부의 가장 큰 이유는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이다.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은 28.0%이며, 가입 거부 이유는 예치금 부담과 ‘농가경영에 도움이 안 돼서’가 크다. 선도거래소 이용 의향은 38.4%로, ‘거래소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결정적인 가입 거부 이유로 나타났다.

〈표 1-23〉 재해보험 가입실태 및 보험 상품 수용성(요약)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가입률 및 의향	거부 주요 이유	가입률 및 의향	거부 주요 이유	가입률 및 의향	거부 주요 이유
재해보험 가입률	46.4%		39.8%		-	
마진 보험	32.5%	보험료 부담	36.4%	마진 하락이 농가경영에 큰 영향 없음	43.6%	보험료 부담
소득 안정 계정	28.5%	예치금 부담	28.0%	농가경영에 도움이 안 될 것임	43.6%	예치금 부담
선도 거래소	-		38.4%	거래소 이용이 어려울 것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축산 농가는 마진보험 또는 소득안정계정 가입 의향이 각각 43.6%로, 상대적으로 논벼 및 과채 농가에 비해 가입 의향이 높다. 가입 거부 주된 이유는 각각 ‘보험료 부담’ 또는 ‘예치금 부담’으로 나타났다.

농업 유형에 관계없이 마진보험 및 소득안정계정 가입 거부의 주요인이 보험료 또는 예치금 부담이므로 보험 상품 도입 시 자기부담률 또는 의무 예치금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과채 농가의 경우 선도거래소 도입 시 거래소 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지원이 제공된다면 프로그램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진보험과 소득안정계정의 경우 ‘농가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 역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위험관리 효과 등에 대한 정책적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4. 농가 특성에 따라 다른 재해보험 수용성

논벼 농가는 영농경력이 20년 미만, 조수입이 높을수록,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다. 마진보험은 영농경력 20년 미만, 조수입이 높을수록, 60대 응답자일 경우 가입 의향이 높다. 소득안정계정은 영농경력 20년 미만, 조수입 2천만~5천만 원 미만,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다<표 1-24>.

과채 농가는 영농경력 20년 미만, 조수입이 높을수록,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고, 과수 농가가 채소 농가보다 가입률이 높다. 마진보험 가입 의향은 영농경력과 관계없이 40% 정도로 일정하지만, 조수입이 5천만~7천만 원 미만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가입 의향이 가장 높고,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다. 소득안정계정의 경우 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다. 선도거래소 가입 의향은 영농경력과 조수입과 큰 관련이 없었으나,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다<표 1-24>.

축산 농가는 양돈 농가, 경력 20년 이상, 조수입 2억 원 이상, 또는 응답자 연령

이 낮을수록 마진보험 가입 의향이 높다. 소득안정계정은 경력 20년 이상, 조수입 2억 원 이상, 응답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다<표 1-24>.

〈표 1-24〉 보험상품 가입 견인 요인(요약)

구분	논/벼 농가	과채 농가	축산 농가
재해보험	· 경력 20년 미만 · 높은 조수입 · 낮은 연령	· 과수 농가 · 경력 20년 미만 · 높은 조수입 · 낮은 연령	-
마진보험	· 경력 20년 미만 · 높은 조수입 · 60대	· 영농경력과 무관 · 조수입 5천만~7천만 원 · 낮은 연령	· 양돈 농가 · 경력 20년 이상 · 조수입 2억 원 이상 · 낮은 연령
소득안정계정	· 경력 20년 미만 · 조수입 2천만~5천만 원 · 낮은 연령	· 경력 20년 이상 · 낮은 연령	· 경력 20년 이상 · 조수입 2억 원 이상 · 낮은 연령
선도거래소	-	· 영농경력과 무관 · 조수입과 무관 · 낮은 연령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이처럼 영농경력, 조수입, 연령과 같은 농가의 특성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실태가 다르고, 마진보험, 소득안정계정, 선도거래소 도입 시 가입 의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 상품 도입 시 농가 특성에 따라 가입 및 지속을 유도할 방안도 다르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험료나 예치금 부담을 이유로 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농가의 비율이 높다. 이들이 유동성 제약에 처할 경우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 상품 한 가지만 선택할 유인이 있어, 경영 위험 감소 다변화 효과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복수 상품에 가입 의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KREI

www.krei.re.kr

농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인 위험관리 수단 연구
부속 연구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933-5500 F. 061) 820-2211

